

인권정보자료실
CPe1.15

전쟁과 인권

-2001 민간인학살 심포지움

때 : 2001년 6월 27일(수) 오후1시-5시

곳 :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
(www.genocide.or.kr 02-736-5158)

CPe1.15

전쟁과 인권

-2001 민간인학살 심포지움

때 : 2001년 6월 27일(수) 오후1시-5시

곳 :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
(www.genocide.or.kr 02-736-5158)

목 차

1 부

새롭게 밝혀지는 민간인 학살의 지방사적 인식

사 회 : 서봉석(산청군 의원·경남민간인학살모임간사)

- 발표 1. "여순사건의 진상과 집단학살의 기억" ----- 1
이 영 일 소장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 "경남지역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 -----23
전갑생 진상조사팀장
(민간인학살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지역모임)
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 85
-광주·전남지역의 실태조사에 대한 중간보고
최정기 박사
(전남대 사회학과 강사, 광주인권센터 운영위원)
4. "대구·경북지역 민간인학살 사례보고" ----- 97
노용석 강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대구경북 공동조사단장)

2 부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사 회 : 강창일(배재대 교수, 제주 4·3 연구소장)

토론자 : 정범구(국회의원)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장완익(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부 주제발표자

여순사건의 진상과 집단학살의 기억

이 영 일 소장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14연대 반군에 의해 한반도 남단 전남 여수에서 발생하여 전남 동부지역 일대에 급속히 파급된 여순사건에 대해 그 동안 왜곡된 진상과 반군 및 진압군의 양 주체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한 유형들을 열거해 보면서 여순사건의 진상과 민간인 집단학살의 기억을 지금까지의 운동의 성과와 한정된 자료 및 문헌을 통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여순사건의 진상에 있어서는 1948년 2월 5·10 단독선거를 전후로 한 남한사회의 사회적 배경과 반군의 주력이었던 국방경비대의 성격과 위상 및 반란의 배경과 그 경위 그리고 여순사건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대응과 역사적 왜곡 및 불법적인 국가폭력에 대한 실상과 초법적인 상태의 계엄법과 국방경비법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여순사건 과정에서 자행된 집단학살을 시기별, 학살주체별, 피학살자별, 학살형태별 등의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서 이를 통해 이승만 정권에 의해 자행된 여순사건의 민간인 집단학살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악마의 시대였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인권이라 했다. 인권의 고귀함과 생명의 귀중함을 일컫는 말인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점을 인식하여 인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일신시키고자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순사건 당시에 여수를 비롯한 전남동부지역 일대에서는 8개 지역에서 만명이라는 무수한 인명이 집단학살을 당했다. 민족공동체의 일원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아군에 의해 집단학살을 당한데에 대하여는 여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킬링필드나 동티모르의 사태에서나 볼 수 있는 야만의 시대가 우리에게도 분명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체쳐두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럴싸하게 인도적 차원의 파병까지 해 가며 태연하게 53년여를 살아왔던 것이다. 죽음과 시체를 온 적막강산에 유기하여 버려둔 채 아직도 유교적 정서가 진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이요 위선인 것이다. 도덕성을 상실한 인권 유린의 시대, 피에 굶주린 죽음의 시대, 가공할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의 기억을 떠 올리며 인권지상주의와 민족공동체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2. 여순사건의 진상

1) 당시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남한사회의 사회적 배경

해방초기 전남의 대부분 지역은 1946년 전반기부터 우익의 우세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미군의 진주로 인민위원회 조직이 해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조선공산당이 불법화되면서 전남지역에서도 좌익세력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전남의 동부지방은 해방초기부터 사회경제적인 조건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우익세력에 비해 좌익세력의 힘이 약한 지역이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좌익세력이 별다른 활동을 벌일수 없었기 때문에 미군에 의한 탄압 역시 미미한 정도였다. 따라서 동부지방에서는 좌우익간의 공존관계가 1948년 초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전남동부지방의 좌우익간의 갈등과 공존 관계는 계속되는 인플레이, 강제적인 미곡수집 등의 누적으로 일반대중의 삶의 조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동시에 분단의 기정사실화 되기 시작한 1948년 봄부터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2월 6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을 저지 당함으로써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거의 확실해지자 민전과 남노당은 2월 7일을 기해 유엔 한위반대 남조선총파업위원회의 명의로 전국적인 파업과 파괴, 시위, 맹휴 등을 선전 선동해나갔다.

경인지역 일대를 비롯하여 경남북, 전남북,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파업, 파괴, 시위, 맹휴 지역이 확대되어 갔으며 전국적인 교통과 통신망, 각 생산기관, 행정기능이 일시 마비되기도 하였다. 2.7구국투쟁시기에는 주로 파업, 파괴, 맹휴, 뼈라살포, 시위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경남 일대와 수원에서는 경찰서 및 관공서 습격, 우익 테러로까지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전남지방에서는 습격과 테러사건과 같은 큰 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5.10 제헌선거를 위한 유권자 및 입후보자 등록이 1948년 3월 30일부터 시작됨으로써 남노당을 중심으로 한 단선단정반대투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2월과 3월에 걸쳐 전개한 이른바 구국투쟁은 4월에 들어서는 선거를 강행하려는 미군정과 이승만 한민당의 우익세력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실력으로 단독선거를 저지한다는 공격적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군정의 경무부장 조병옥은 예상되는 남노당의 단독선거 파괴공작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4월 중순 선거를 한달 가량 앞두고 향토방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외래의 불순분자 내지 모략선동의 여지를 봉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각 경찰지서 혹은 동리 가로 단위로 경찰보조력으로써 향보단 설치를 지시했다. 남노당은 남북연석회의의 결정에 따라 남조선단선반대투쟁 전국위원회를 각 시군에 조직하고 선거저지공작을 2단계로 펼쳐나갔는데 선거 실시 전까지는 선거를 파탄시키는 투쟁을, 선거가 실시되면서부터는 무효화투쟁을 전개해나갔다. 본격적인 5.10선거 저지공작은 김구, 김규식 등 단선을 반대하는 우익, 중도계정당 사회단체들이 남북연석회의에서 돌아온 직후 김구, 김규식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5월 6일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남노당은 5월 7일을 전후해서 전국적인 파업, 파괴, 맹휴, 시위, 뼈라 살포, 경찰서 습격, 투표소습격, 우익요인 및 청년단 테러 등을 통해 격렬한 선거저지투쟁을 선전 선동해나갔다.

한편 전남동부지방에서는 구국투쟁과정의 구레, 순천을 포함한 4개군에서 5.10선거 저지투쟁이 발생하였다. 즉 1948년 3.1절을 계기로 구레의 경찰지서 및 우익습격사건, 순천의

시위군중과 우익학생과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전남동부지방의 군중들은 점차 급진화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5월 10일 제헌 선거를 전후로 해서 더욱 촉진되고 있다. 5월에 들어 3.1절에 격렬한 대규모 시위양상을 보인 순천은 우익테러로까지 발전하고 있었으며 1946년 가을항쟁과 1948년 구국투쟁과정에서 거의 군중의 폭력사건이 나타나지 않았던 광양과 여수에서는 경찰지서와 투표소 습격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고흥에서 48년 3월 29일 새벽 3시에 安在貞, 高興南, 李某 등 3명이 대서면지서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은 9월 3일 수도청 경찰청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돌아온 귀환동포들의 급작스런 증가와 미군정의 미곡 수집령으로 인해 군정당국에 대한 원성이 높아가고 있었다. 여수에서는 1948년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의 2기분 배급을 주지 않아서 8만 여수읍민의 원성이 높은 실정이었다. 식량영단 당국은 2기분 배급식량을 조정하여 분배하여야 하나 조정공장에서 이윤이 박하다 하여 조정을 하지 않아 여수 군민의 생계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이러한 행정당국의 실정과 더불어 48년 7월의 수해로 각 지방에 이재민들이 무더기로 발생하여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순천인근의 주민들은 동정을 요구하고자 救濟會를 조직하고 구제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폭풍우와 수해의 피해로 여수에서는 여수읍민들의 식량사정이 대단히 좋지 않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단정단선반대투쟁이 절정을 이루었던 데다가 춘궁기까지 겹쳤던 1948년 5월초에 광주의 4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하는 14연대가 여수에 창설되었다는 점이다.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수립·선포로 한민족은 비록 반쪽이나마 일제 식민통치와 미군정 통치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제1공화국의 출범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이승만의 정치적 지지 기반은 매우 취약했다. 그것은 지주, 보수적 언론인, 지식인을 주축으로 한 한민당, 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강력한 관료체제, 단결심이 강하고 외부의 통제를 받지않고 좌익을 제압하는 데 있어 '선봉장'인 경찰조직, 독촉, 대동청, 서북청 등의 청년단체, 농촌지주층,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한 독촉국민회 등의 정치·청년, 사회단체 등이었다.¹⁾

그러나 제1공화국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경비대내에는 남로당원 및 그 동조세력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폭동이 진행중에 있었고 미군정기의 '가을폭동'지역인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에는 좌익이 잠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방이후 절정에 이른 민중들의 민생(民生)문제였다.

2) 국방경비대의 성격과 위상

1946년 1월 15일 제1연대 창설로부터 만들어진 국방경비대는 미군정의 대한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만들어졌다. 미군정에서는 원래 장래 수립될 국가의 군대 창설을 계획하였으나, 소련의 반대를 예상한 미국의 제한으로 그 성격이 '경찰예비대'로 약화된 국방경비대를 창설

1) 김정원, 『분단한국사』, 동녘출판사, 1985, 143쪽, 이기하, 『한국정당발달사』, 의회정치사, 1962, 54-80쪽, G. Henkerson, 『Korea :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vard Univ. press, 1968, 196쪽.

하였다. 국방경비대를 창설하면서 미군정에서는 특별한 제한이나 사상검열이 없이 '불편부당·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국방경비대원들을 모집하였다.²⁾ 이 때문에 국방경비대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하였다. 일제시기 일본군·만주군·중국군 등에서 군대 경력을 쌓았던 세력들이 참여하였고, 미군이 진주하기 전부터 사설군사단체에서 조직·활동했던 세력들도 참여하였다. 미군정은 국군준비대·학병동맹 등과 같이 해산명령을 거부했던 사설 군사조직들을 군정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로 해산시켰고, 다른 한편으로 이들을 국방경비대 내부에 편입시켰다. 미군정의 이 같은 정책은 모든 사설군사단체의 해산을 가져왔고, 이 단체들에서 활동하였던 사람들은 국방경비대에 참여하거나 다른 부문에서 활동하였다.

한편 국방경비대는 만들어질 때부터 향토연대로 편성되었다. 미군정에서는 국방경비대 창설 계획인 '뱀부계획(Bamboo Plan)'을 수립하여 각 도에 1개 연대씩 편성하였다. 각 연대의 장교들은 통위부와 국방경비대 총사령부의 통제를 받았지만, 각 연대 사병들의 모집과 훈련 그리고 예산 운영과 활동은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였다.

'경찰예비대'로 창설된 국방경비대는 개인화기 이외의 다른 무기 훈련을 금지하고 제식훈련과 '폭동진압법'만을 훈련시키는³⁾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경비대 대원들은 국방경비대를 '군대의 모체'로 인식하였다. 또 사설군사단체 성원들도 그 조직이 해산된 후 '국방경비대가 군대의 모체'라는 생각으로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였다. 다양한 세력의 국방경비대 참여와 향토연대, 국방경비대는 국가가 수립되면 만들어질 '군대의 주역'이라는 의식 등은 국방경비대의 특성이 되었다. 특히 향토연대와 '군대의 주역'이라는 의식은 국방경비대가 당시 민중들에게 친밀집단으로 지탄받고 있었던 경찰과 다른 성격의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경찰은 "국방경비대는 빨갱이 소굴"이라고 비난하였고, 국방경비대는 경찰을 "일본놈 앞잡이 하던 사람들"이라고 맞섰다.⁴⁾ 경찰은 미군정에 국방경비대를 비방하는 보고를 제출하였다.⁵⁾ 이렇듯 국방경비대는 경찰과 극우 성향의 우익 단체 등과 미군정기 내내 끊임없이 대립하였다.⁶⁾

3) 봉기의 배경과 경위

- 2) 국방경비대 창설 당시 국방사령부 고문이었던 이용준은 신원조사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미군정 관리는 군내 사찰기구의 활용 등을 이유로 내세웠고, 그뒤의 과정에서 볼 때 미군정 관리의 말이 실행되었다.
- 3) Robert. Sawyer, 1962,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 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USGPO, 24쪽.
- 4) 짐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1995, 『한국의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 138쪽.
- 5) 미군 방첩대는 경찰이 국방경비대 관련 보고를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각 지방의 방첩대 지부에 주지시키기 위하여, 광주의 제4연대에 관한 경찰의 의도적 왜곡 보고 사례 7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때문에 미군 방첩대는 경찰과 국방경비대 관련 개별 보고는 그 정보의 원천을 추적해야 하며, 서로를 비난하려는 것이지 파악해야 한다고 각 지부에 지시하였다. *Weekly Information Bulletin(이하 Bulletin)*, #12, 1947. 7. 10.
- 6) 국방경비대 제1연대 연대장 베로스(Russel D.Barrows)중령은 국방경비대와 경찰의 대립이 "일주일에 한 번씩(about once a week)"로 발생한다고 말하였다. United States Army Forces, Korea Counter Intelligence Corps Seoul District Offices Apo 235, *Korean Constabulary, Conflict Between Korea Police and Summary of Information*, 7 Jan. 1947.

남한만의 단선·단정이 추진되면서 각지에서는 여기에 반대하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단선·단정에 반대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미군정은 4·3항쟁 초기에 각도에서 경찰을 동원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미군정은 4·3항쟁 초기에 경찰의 힘만으로 진압이 되지 않자 진압작전에 국방경비대를 동원하였다. 경찰은 해안 부근 마을의 치안활동을 담당한 반면, 국방경비대는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⁷⁾ 이렇듯 국방경비대의 강력한 토벌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저항이 제주도 모슬포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미군정은 이같은 사건이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⁸⁾ 그러나 미군정의 예상과는 달리 1948년 6월 18일 초토화 작전을 지휘했던 제9연대장 박진경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제9연대원 탈영사건과 함께 동족을 살상하는 작전에 반대하는 국방경비대원들의 저항이었다.

박진경 암살사건을 계기로 전군 차원의 사상검열(Screening)이 이루어졌다.⁹⁾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숙군의 합법성이 부여된 계기였다. 이에 따라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보다 강력하고 조직적인 숙군이 전개되었다. 신임 국방장관에 취임한 이범석은 공공연하게 북진통일을 표방하는 한편,¹⁰⁾ 다른 한편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제거를 명분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상검열과 숙군이 이루어졌다.¹¹⁾ 이렇듯 여순사건이 일어난 뒤 미군 보고서에는 다음의 논평이 실려 있다.

수개월 동안 경비대는 주로 경찰에 의해 공산주의자들의 은신처로 비난받아왔다. ... 경비대 장교들은 열심히 경비대 내에서 발견된 공산주의자들을 적발, 제거해왔다. 그들의 노력이 성공했기 때문에 적어도 6개 연대가 폭도들과 접촉하였지만, 대규모의 반군이 순천에 도착했을 때에 1개 중대만이 반군으로 탈영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경비대 내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거나 경비대가 커다란 의심을 받을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반란의 발발과 진압에서 알 수 있다.¹²⁾

위의 보고에 나타나듯 숙군은 각 연대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¹³⁾ 그리고 숙군의 여파

7) 『조선일보』 1948. 6. 4 ; 『서울신문』 1948. 6. 4(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7권, 248쪽).

8) *G-2 Weekly*, #141, 1948. 5. 21~1948. 5. 28.

9) 1948년 7월 9일부터 16일까지의 미군의 주간 동향보고 중 남한의 무장력에 관한 항목에는 "사상검열은 계속되고 있다(Screening continues)"는 내용이 처음 나오고 있다. *G-2 Weekly*, #148, 1948. 7. 9~7. 16.

10) 1948년 9월 8일 이범석 국무총리는 미국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실패하면 전쟁에 의하여 남북통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하여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보처장 김동성은 정부 일각에서 표명된 북진 무력통일은 정부의 공식입장은 다르다고 해명하였다. 『동아일보』 1948. 9. 11. ; 『동아일보』 1948. 9. 18.

11) 이외에도 1948년 8월 1일 이후 지문채취작업(fingerprinting)은 진행되며, 이 작업은 경찰의 협조 아래 이루어질 계획이었다. 9월 초순까지 대략 절반 정도의 국방경비대원 지문채취가 완료되었다. CG, USAMGIK, *Current Constabulary Affairs*, 1948. 7. 20 ; C.G, PMAG, *PMAG Weekly Activities*, 1948. 9. 13.

12) *G-2 Weekly* # 163, 10. 22~10. 29.

13) 당시 미군 고문이었던 하우스만의 에피소드는 숙군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시사해준다. 하우스만은 여순사건 이전 어느날 일선부대 방문의 에로를 백선엽 정보국장에게 토로했다. 그러자 백선엽은 정보국 명의로 쇠메달을 주었다고 한다. 그 이후 어느 부대를 방문할 때 이 메달은 조선시대의 마

제14연대의 모부대인 광주의 제4연대까지 미쳤다. 그리고 제4연대의 숙군은 제14연대까지 이르게 되었다. 제4연대 출신으로 제14연대 창설 요원이며 이등중사로 제14연대 남로당 세포 조직 제14연대 독립대대책이며 재정책이었던 김영만이 10월 11일 체포되었다. 김영만은 4연대 근무할 당시 그의 세포 조직원이었던 제4연대원의 밀고로 체포되었다. 김영만의 체포 계획을 미리 알았던 제14연대 남로당 조직에서는 김영만이 체포당하는 것으로 조직을 지켜낼 것을 결정하였다. 김영만을 도피시킨다면 그에 따른 조직 수사의 확대를 우려하여 김영만의 체포로 조직 보위를 꾀했다고 한다.¹⁴⁾ 이렇듯 숙군의 여파로 제14연대 남로당 조직의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제주도 파병의 문제가 놓여 있었다.

제14연대의 제주도 파병이 언제 결정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¹⁵⁾ 그러나 10월 초순부터 시작된 시가전 훈련과 무기의 교체는 제14연대가 제주도에 파병될 계획임을 짐작케 하였다. 실제 출동명령은 10월 15일 우체국 전보를 통해서 내려졌지만¹⁶⁾ 그 이전부터 부대 내에는 제주도 파병의 소문이 유포되어 부대원 대부분이 알고 있는 실정이었다.¹⁷⁾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제14연대 내의 남로당에서는 숙군의 위협과 제주도 파병이라는 객관적 조건에서 적극 대응하였고, 결국 무장봉기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¹⁸⁾ 그리고 경찰에 대항하며 동족상잔인 제주도 파병에 반대한다는 명분이 제시되었다.

제14연대의 좌익들은 10월들어 동요하고 있었다. '제주4·3폭동'후 제11연대장 암살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은 숙군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제14연대에도 파급되어 소위 '혁명의용군사건'¹⁹⁾에 연대장 오동기 소령이 연루되어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숙군의 와중에서 10월 15~16일경 제14연대에 여수우편국 일반전보로 10월 19일 20시에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²⁰⁾ 갑작스런 제주도 출동명령은 좌익들

에게 '동족상잔'과 '반란'중 양자 선택을 강요했다. 한편 제14연대내에는 제주도 폭동 진압을 위해 신식무기(M1, 카빈, 기관총)와 풍부한 탄약이 지급되었으며, 반납해야 할 구식무기(일제식 99식 소총)가 병기고에 그대로 남아있어 연대내 좌익들의 반란을 촉진시켰다.²¹⁾

1948년 10월 19일 새벽 전남 여수 신월리 제14연대 병영에서 여순사건이 시작되었다. 지창수 상사의 선동 연설로 시작된 봉기는 순식간에 2,000여명 이상의 병사들이 합세하였다. 제주도 파병반대와 경찰 처단을 목표로 시작된 제14연대 봉기에 처음 참여한 인원은 보고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고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제14연대 여순사건 참가 인원

보고자	보고 일자	참여 인원	비고
G-2 일일보고	1948. 10. 21.	24,000여명	
김백일	1848. 10. 21	800~2,000명	
Joint Weeka		2,400명	
주한미군 제24군단	1948. 11. 10.	3,000여명	
이범석	미 상	3,708명	사살:852명, 포로:2,856명, 탈출: 수백명

※ 출전

1. G-2 Periodic Report
2. [동광일보 호외] 1948. 10. 21.
3. 『주한미대사관 보고서』
4. G-3 Section, XXIV Corps, History of the Rebellion of the Korean Constabulary at YOUSU and TAEGU, 1948. 11. 10.
5. Report on the Internal Insurrection After April, 1948, made by Minster of National Defense, Lee Bum Suk

위의 표에 나타나듯이 보고자와 보고 시기에 따라 제14연대 봉기에 참여한 인원이 각기 다르다. 보고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10월 19일 최초의 제14연대 봉기에는 최소 2,000여명의 병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숫자는 제14연대가 완전 편성되었을 때인 1948년 10월 초순 병력이 약 3,000여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부대원의 2/3 정도가 참가한 것이었다. 이렇게 제14연대 병사들의 다수가 봉기에 적극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창수의 연설과 [제주도 출동거부 병사위원회]의 성명, 그리고 여순사건 직후 발표된 현지 사령부의 발표문에는 이들이 봉기하며 적극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잘 나타나 있다.

제14연대 인사계 선임하사관 지창수는 여수경찰과 일본군이 여수에 상륙하여 공격하려 하며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에 반대하고, 남북통일의 주장하는 요지의 연설로 병사들을 선동하였다.²²⁾ 10월 20일 [제주도 출동거부 병사위원회] 명의의 성명서에는, 제주도 애국인민

21) J. Reed. 「The Turth about the Yosu Incident」, 2쪽 J. R. Merrill. 앞의 책, 214쪽에서 재인용.
22) 지창수는 "지금 경찰이 우리에게 쳐들어 온다. 경찰을 타도하자, 우리는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

패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하우스만은 이 사례를 이야기하며 정보국은 그렇게 무서울 때였다고 회고했다.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앞의 책, 187~188쪽.

14) 김영만의 증언.

15) 다만 한 가지 단서가 될 만한 미군 보고서가 있다. 한미 연합 장교단은 10월 3일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여기서는 제주도의 상황을 토의하고 추가로 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Chief PMAG, WEEKLY ACTIVITIES OF PMAG, 11 Oct 1948

16) 지금까지 출동명령이 우체국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유출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왜 우체국으로 내려졌는가의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당시 육군의 통신수단은 지금과 같이 발달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유일하게, 그리고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우체국의 전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17) 정두일(여수 출신 청년, 제14연대 출신) 증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앞의 책, 193쪽.

18) 당시 남로당에서 이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가가 논란거리이다. 최근 한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남로당 전남 도당에서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서 심사숙고 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실정이었다. 즉 10월 11일 이후부터 제14연대 내에서는 심각하게 무장봉기를 고려했을 것이나, 이 결정에 대해서 전남 도당은 정부의 탄압으로 장흥에 피신한 상태에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19) 『한국전쟁사』, 485쪽, 육군본부, 『공비토벌사』 18쪽, J.R. Merrill, 『Internal Warfare in Korea, 1948-1950』, (Univ. of Delaware, PH, D. 1982), 210쪽.

20) 『여수·여천향토지』, 307쪽 따라서 군대기밀이 외부로 노출되어 연대내의 좌익과 여수읍내의 남로당계가 사전에 반란을 모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그 당시 왜 '일반전보'로 제주도 출동명령이 하달되었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한 제주도 출동에 반대하며 조선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쫓기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조국통일, 조선인민공화국 지지 등을 봉기의 목표로 내세웠다.²³⁾

제14연대의 봉기는 순식간에 인근의 전남 동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²⁴⁾ 이 확산은 다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제14연대 병영에서 봉기한 제14연대 병사들은 곧바로 여수 경찰과 철도경찰을 격퇴하고 여수를 점령하였다. 그 뒤 김지회의²⁵⁾ 지휘 아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600여명의 병사들이 여수역에서 5량의 기차와 차량을 징발하여 10월 20일 오전 9시 20분 순천으로 이동하였다. 10월 20일 아침 순천에 도착한 반군은 순천에서 경찰과 교전한 뒤 이날 오후 순천을 점령하였다. 이 때 순천에 파견되었던 제14연대 2개 중대는 선임중대장인 홍순석의 지휘 아래 반군에 합류하였다. 순천을 점령한 뒤 1,000여명 정도의 반군은 남원을 향해 북진하였다. 10월 20일 오후에 순천 북방으로 전진한 반군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정부군의 저지를 받았다. 정부군은 이정일이 지휘하는 제4연대였다. 이곳에서 2차례의 교전 끝에 정부군의 저지선을 돌파하지 못한 반군은 다시 순천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순천으로 돌아온 반군은 김지회의 지휘 아래 순천 주변의 곡성, 보성, 구례 등지로 흩어졌다. 10월 21일 이후 정부군의 진압작전이 강력하게 전개되자 이들은 지리산으로 입산하여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순천 방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여수에 남아 있던 제14연대 병사들의 일부는 10월 21일 광양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진압부대가 제2차로 여수를 공격하기 앞선 10월 24일 밤 5시경이 되자 백운산과 벌교 방면으로 퇴각하였다.²⁶⁾ 제14연대의 주력이 떠나간 상태에서 여수지역에는 지역민들만이 남아 있었다.

여순사건은 5·10사건 이전에 발생한 제주 4·3항쟁과는 또 달리, 전남 동부지방이 순식간에 '인민공화국 지지'를 외치는 좌익 손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²⁷⁾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를 즉각 반란으로 규정하고 진압에 나섰다.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 이범석

등을 반대한다. 우리는 조국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원한다. 지금 북조선인민군이 남조선해방을 위하여 38선을 넘어 남진중에 있다. 우리는 북상하는 인민해방군으로 행동한다"고 선동하였다.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1967, 452~453쪽; [해익, 여수재성동문회 회지] 2호(여수지역 사회연구소, 1998, 앞의 책, 153쪽에서 재인용).

23) [여수인민보] 1948. 10. 2(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앞의 자료집, 153~154쪽에서 재인용).

24) 순식간에 동부지역으로 확산된 과정은 제14연대 주력 부대의 행로와 비슷하다. 물론 반군이 들어가기 전에 지방 좌익들이 먼저 호응하여 봉기한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제14연대의 행로와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즉 한편으로 여수→순천→보성·곡성·구례→지리산의 행로와, 다른 한편으로 여수→광양→백운산의 행로이다. 이들 지역은 여수 주변 지역이면서 또한 제14연대 관할지역이기도 하다. 즉 제14연대 병사들의 고향이기도 하였다. 결국 향토연대의 특성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행로일 가능성이 있다.

25) 김지회 - 10505. 함남생. 함흥농고 졸업. 육사 3기. 1947년 4월 19일:제4연대. 1948년 6월 1일:제14연대. 1949년 5월 31일:불명에 파면.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의 지도자로 활동하다 1949년 5월 사살. 『임관순대장(10505)』; 『자력표(10505)』.

김지회는 당시 남로당의 중앙당에서 관리하는 조직원이었던 것 같다. 여순사건 발발직후 김지회는 제14연대 사병들의 감시받았다고 한다. 김영만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제14연대 남로당 세포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김영만의 증언.

26) 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 1991년 겨울호, 277쪽.

27) 서중석, 1996,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 1948~1950 민주주의·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역사비평사, 168쪽.

은 10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은 공산주의계열의 책동과 음모로 발생한 반란으로 규정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강력한 토벌작전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²⁸⁾

그런데, 여순사건의 원인과 성격을 놓고 당시 정부와 현지 사령부는 서로 다르게 발표하였다. 이범석 국무총리는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이 극우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연합으로 발생한 성질의 반란으로 규정하였다.²⁹⁾ 당시 전투사령부 보도부에서는 여순사건의 발생원인으로 반경감정을 가진 하사관들과 연대 내의 좌익사상을 가진 간부들의 선동으로 일어났으며, 그 목적지는 구례경찰서였고, 지방 좌익과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발표하였다.³⁰⁾ 이렇듯 정부 당국과 현지 사령부의 발표가 다른 이유는, 정부는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현지 사령부는 현지에서 잡힌 포로들의 심문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에 근거한 발표였기 때문이었다.

정부에서는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육군 총사령관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였고, 송호성은 특별기편으로 10월 21일 하오 1시 광주에 도착하였다.³¹⁾ 10월 22일 이범석은 '반란군에 고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10월 21일부터 시작된 정부군의 진압작전에는 총 5개 연대의 10개 대대와 1개 비행대(경비행기 10대), 해안경비대 함정 등이 동원되었다.³²⁾ 10월 20일 진압작전이 시작될 때는 3개 연대를 동원한 진압작전을 수립하였다.³³⁾ 그러나 신무기로 무장하고 잘 훈련된 반군의 저항으로 정부군의 진압작전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고,³⁴⁾ 10월 21일 진압작전은 재조정되었다.

광주의 제4연대는 서쪽으로부터 여수를 포위하며, 전주의 제3연대는 대전의 제2연대와 협력하여 북쪽으로부터 여수를 포위하며, 군산의 제12연대는 여수의 북서쪽을 향해 군산을 출발하며, 부산의 제5연대는 바다로부터 포위를 유지하며, 대구의 제6연대는 여수의 북쪽을 산맥을 횡단하며, 마산의 제15연대는 여수의 동쪽으로 진격하는 것이었다.³⁵⁾ 10월 22일 국방부 총참모장 채병덕은 기자회견에서 광주와 마산으로부터 막대한 병력을 동원하였고, 순천과 여수반도에서 압박 섬멸전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음을 밝혔다.³⁶⁾ 정부군의 진압작전은 여수를 중심으로 사방을 포위하여 반군을 섬멸하는 압박 섬멸전이었다.

28) [자유신문] 1948. 10. 22(국사편찬위원회편, 1999, 『자료대한민국사』 8권, 792~794쪽.)

29) AMERICAN MISSION IN KOREA, *Report on the Internal Insurrection After April, 1948, made by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Bum Suk.*

30) 『자유신문』 1948. 11. 8.

31) 『동광신문』 1948. 10. 23. 이외에도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하우스만 대위(임시군사고문단 G-3 고문관), 리드 대위(임시군사고문단 G-2 고문관), 트리트웰 대위(Treadwell, 제5여단 고문관), 프레이 대위(Frye, 제5여단 수석고문관), 채병덕 대령(국방부 총참모장), 정일권(육군 참모장), 백선엽 대령(육군 정보국장), 고중위(인용자 주: 고정훈으로 여겨짐. 육군 정보장교) 등이 광주에 도착하였다.

32)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470쪽.

33) [자유신문] 1948. 10. 22.(『자료대한민국사』 8권, 792~794쪽.)

34) 채병덕은 10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가 늦은 이유는 갑자기 일어났고 내부적으로 급습을 당하고 적의 병력이 상상보다 컸기 때문에 많은 부대를 집중시킬 필요와 작전의 비밀로 발표가 늦었다고 말하였다. [서울신문] 1948. 10. 23. (『자료대한민국사』 8권, 820쪽.)

35) AMERICAN MISSION IN KOREA, *Report on the Insurrections After April 1948, made by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Bum Suk.* 1948. 12. 14

36) [서울신문] 1948. 10. 23(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8권, 820쪽)

10월 27일 정부군은 여수를 탈환함으로써 여순지역의 진압작전은 마무리되었고, 이때부터 정부군의 작전은 남원, 구례, 백운산 그리고 지리산 지역의 반군들을 소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 여순사건 진압작전에는 총 140명의 장교와 4,732명의 군인들이 참가하였다. 정부군의 진압작전에는 주한 미군의 지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주한 미군 제24군단 G-2는 1948년 10월 20일 오전 9시 10분에 속보(flash report)를 받았고, 10시 15분에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방군사고문단(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으로부터 여수사건을 확인하는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은 뒤 제24군단 G-2와 G-3은 10월 20일 1700에 작전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4시간 경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날 상오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인 로버츠 준장 사무실에서 로버츠, 이범석, 송호성, 하우스만, 몇몇 참모들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³⁷⁾ 이 회의에서는 전투사령부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그뒤 하우스만을 비롯한 미군 고문관들은 정부군의 진압작전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하우스만의 회고처럼, 미군은 탄약·무기·식량을 비롯해 통신수단까지 제공하였다. 결국 미군의 원조가 없었다면 여순사건은 더욱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³⁸⁾

4)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대응과 국가폭력

여순사건이 정부수립 두 달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사건을 진압하는 방식 그리고 사후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48년 5·10 총선거와 제헌헌법 제정을 통하여 수립된 제1공화국은 남한만의 정권수립에 동의하는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의 연대로써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한단독정권을 반대하며 남북협상을 이끌었고 단독선거를 보이콧한 김구는 신생 이승만 정부의 큰 우환이었다. 그는 아직도 대한민국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제도권 바깥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국민으로부터는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신망 받고 있었고 무소속 소장파 국회의원 등으로부터는 반이승만세력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으면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순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있던 정부는 이틀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11시 이범석 국무총리 발표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범석 국무총리는 22일 '반란군에 고한다'는 포고문에서도 반란군이 "일부 그릇된 공산주의자와 음모정치가의 모략적 이상물"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는데,³⁹⁾ 국무총리가 지목한 '극우정객'과 '음모정치가'가 누구인지는 이 날 각 신문에 일제히 보도된 김태선 수도청장의 혁명의용군 조작사건 발표를 통해 분명해졌다.

여순사건의 주모자를 혁명의용군으로 지목한 정부의 주장은 내무부의 국회보고에서 사건 배후는 '최능진 오동기 등이 수모(首謀)로 된 혁명의용군과 좌익계열의 선동에 관련됨이 확실'하다는 것이 내무부의 입장이었다. 최능진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1948년 제헌국회의원

37) 하우스만, 앞의 책, 171~172쪽. 백선엽은 이와 다르게 회고하고 있다. 장소는 국방부에서 긴급대책 회의가 있었고, 이범석, 채병덕, 정일권, 백선엽, 로버츠, 하우스만, 리드 등이 참여했다고 회고하였다. 백선엽, 앞의 책, 164쪽.

38) Robert. Sawyer, 1962,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USGPO, 40쪽.

39) 서울신문, 1948. 10. 24.

선거에 동대문 갑구에서 출마하여 이승만에 대항한 죄였다. 최능진은 유엔감시 하의 남한 정부수립을 방해하고 남북협상이 실패한 후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국방경비대를 이용하여 무력혁명을 감행하려한 인물로 발표되었는데, 그는 남북협상에 나서려는 김구·김규식을 남한 우익진영이 '공산주의자'나 '크레믈린의 신자'나 하는 비난한 것은 민족 지도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인데도 이에 대항하지 못한 남한 청년들은 다 썩었다고 분개할 정도의 민족주의자였다.⁴⁰⁾

단독정부 수립반대·남북협상 등의 정치적 입장은 당시 김구와 한독당 세력이 취했던 노선이었다. '국부 이승만'과 감히 경쟁하려 했던 최능진을 한번 손봐주려 했던 수사는 선거운동원으로 참가했던 군인을 신원보증했던 오동기로 이어졌고,⁴¹⁾ 여순사건이 오동기가 근무했던 14연대에서 일어나게 되자 뜻하지 않게 무력혁명의 죄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당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었으며 여순사건이 일어나던 당시까지도 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미군은 여순사건의 주동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 미군은 기본적으로 김구의 한독당 세력과 진보적인 소장파 세력을 이승만 정권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지목하고 있었다.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군은 반란이 김구 세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김구의 쿠데타설이 나돈다는 식으로 김구의 혐의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⁴²⁾ 이런 기본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여순사건을 김구 세력이 일으켰다고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순사건의 경위에 대한 10월 23일 주한미군사령관 콜터 소장의 발표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는 제주도도 떠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장교와 경비대원이라는 언급만을 하여 정부 발표와 대조를 이룬다. 대한민국 정부측을 인용하여 반란의 주모자를 일부 군인들로 국한시키고 있었고 극우정객이나 혁명의용군 등 정부가 반란의 핵심분자로 지목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⁴³⁾

한편 순천이 진압된 뒤인 24일 이곳을 방문하였던 서울주재 미 외교관은 반란지의 실정을 국무성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기초로 하여 27일 미국무성 맥더모트 대변인은 여순사건에서 남로당이 활동하였다고 발표했다.⁴⁴⁾ 이같은 미국측의 파악은 반란 원인, 주체세력 등의 내용에서 볼 때, 극우정객 결탁을 운운하는 당시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꽤 큰 차이가 있었다. 반란의 진원지로서 김구세력을 지목하고 이를 통해 공격을 취하고자 했던 이승만 정부의 의도는 분명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일반 여론도 이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반이승만 정치세력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의 주요한 공격방향이었던 것은 국회에서는 소장파세력이고 원외에서는 김구 등의 한독당 세력이었다. 결국 정부는 여순사건을 이들 세력을 제거하는 계기로 이용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여순사건이 14연대의 봉기와 이에 따른 지방 좌익세력 참여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 직후의 정부 대응은 김구·한독당, 소장파 세력 등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고사시키

40) 연합신문, 1949. 2. 9.

41) 오동기가 구속된 것은 그가 소개하여 입대한 두 사람이 최능진의 선거운동을 도와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동기는 최능진과 만난 적도 없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1:해방과 건군』, 485~486쪽을 참고.

42) 이에 대해서는 서중석, 1997,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역사비평사, 178~180쪽을 참고.

43) 세계일보, 1948. 10. 24.

44) 조선일보, 1948. 10. 28.

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이승만 정권은 혼란스럽게 남아있던 우익 지배층 내부를 재편함으로써 이승만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지형을 만들고자 했다. 정부는 여순사건을 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된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아니라 일부 우익세력에 의한 쿠데타적 행동으로 국민에게 광고하고, 이를 계기로 삼아 정치세력을 재편하는데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김구의 명백한 부인과 일반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자, 권력에서 소외된 극우정객과 공산주의자들이 합동으로 반란사건을 일으켰다는 정부의 초기 발표는 민간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으로 그 범위가 점차 변화하게 된다. 김형원 공보처차장은 일반인들은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민중이 여기에 호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남 현지에 있는 좌익분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소련의 10월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일대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그들이 일부 군대를 선동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하였다. 즉 반란의 주체는 14연대 장병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조직된 민간 좌익들이라는 것이 발표의 요지였다.⁴⁵⁾ 이 발표는 정부조직인 국군 내부로부터 반란이 처음 일어났다는 점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반란의 초기 주체가 국군임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공보처장의 발표는 우익과 공산주의자들의 연합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정부의 초기 발표를 사실상 수정하고 사건의 주체를 민간 공산주의자로, 14연대 군인은 이에 종속되는 지위로 파악한 것이었다. 반란이 일어난 바로 그 여수의 14연대장이었던 박승훈(朴勝勳)중령도 중앙청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여순사건은 '적색분자들의 계획적인 행동'이고 반란에 가담한 군인은 일개 대대의 병사 5백 명이었다고 밝혔는데,⁴⁶⁾ 이는 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었다. 정부가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선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불뚱은 북한 공산주의 세력으로 번져 나갔으며, 결국 그 피해는 여순지역의 민중이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진압군이 순천과 여수를 완전히 점령한 뒤인 11월 3일 국방부는 '전국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벽보를 각지에 살포하였다. 이 벽보에는 먼저 여순사건을 '민족적 양심을 몰각한 공산도당의 조직과 명령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하는 것이라 비난하는 한편 '소련계국주의의 태평양 진출정책을 대항하려는 공산당 괴뢰정권의 음모'라고 규정했다. 이제 여순사건은 반도 남쪽의 한 지방에서 이승만의 실정에 반항하여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소련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⁴⁷⁾

여순사건의 주체에 대한 규정은 이런 식으로 냉전적 설정으로 이동했다. 이런 뒤바뀐 내부 갈등의 책임을 밖의 확인되지 않은 실체에게 떠넘김으로써 지배층의 실정을 은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내부 갈등 때문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사주로 몰아감으로써 사건 주체의 정당성을 박탈해버리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두 달이 조금 지난 뒤에 발생한 이 사건의 처리야말로 정부

45) 서울신문, 1948. 10. 29.

46) 서울신문, 1948. 10. 29. 박승훈중령은 옷을 갈아입은 후 몇 명의 호위병과 함께 22일 밤 목선을 타고 목포로 탈출하였다. 박중령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던 채병덕이나 정일권의 기자회견이 보통 지방 현지에서 이루어진 것에 비해 박중령의 기자회견이 중앙청 기자단과 이루어졌다는 점은 특이하다.

47) 평화일보, 1948. 11. 5.

의 통치 능력을 대내외에 보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나 다름없었다. 더욱이 정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북쪽에서 끊임없는 준비를 진행중인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남한의 좌익들이 일으킨 사건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응당 철저한 진압이 필요할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11월 4일 담화는 이러한 시각 속에서 나온 강경한 입장 표명이었다. 이 담화에서 이승만은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혹 발표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비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위해야 될 것"이라는 말하였다.⁴⁸⁾ 불순분자 제거를 위해서는 어린이까지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표명은 대통령의 직위에서 맞지 않는 고압적이고 격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⁴⁹⁾ 신생정부의 근간인 군 내부에서 반란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정부의 통치력에 결정적 흠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반란에 민간인까지 가담했다는 것은 반란에 대한 민간인의 광범한 지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으로는 이승만 정부의 실정을 의미했다.⁵⁰⁾ 따라서 이승만 정부는 유엔의 한국승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허약한 정부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고 이를 은폐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정리해보면, 이승만정부는 여순사건의 주체에 대해 맨 처음에는 ① 우익과 공산주의자의 연합이라는 초기 발표에서 ② 민간인 공산주의자가 주동이 되고 군인 일부가 일으킨 것으로 변화되었고 마지막에는 북한으로 그 화살을 돌려 ③ 소련-북한-남한의 공산주의자들로 바꾸어 발표했다. 김구세력을 공격하려는 이승만 정부의 초기 시도가 실패한 것이 분명해지자 공산주의자들로 그 방향을 바꾸었던 것이지만, 정부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은 정부의 변함없는 일관된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5) 초법과 무법적인 상태의 계엄법과 국방경비법

여순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육군참모장 정일권 대령의 10월 26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회견에서였다. 정일권은 "금번 폭동지구에서 실시된 계엄령은 작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처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략하게 발표하였다.⁵¹⁾

48) 국제신문·수산경제신문, 1948. 11. 5.

49) 이승만은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12년이 지난 1960년 4월 15일, 4월혁명이 있기 몇일 전 다시 여순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격렬해지는 마산시위의 배후에는 공산당이 있는데, 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과거 전남 여수에서 공산당이 일어나서 수류탄을 가지고 저희 부모들에게까지 던지는 이런 불상사는 공산당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서울신문, 1960. 4. 15. 석간). 여수에서 어린이가 자기의 부모에게 수류탄을 던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승만의 이때 담화가 처음(?)인데, 이렇게 이승만은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를 창조했다.

50) 여순사건은 발생에 대해 서울 AP특과원은 "이 반란사건은 지난 8월 15일에 겨우 수립된 대한민국에 대한 최초의 큰 시련이었다"라고 논평하였고 미국의 포스트지는 "이승만박사의 정부가 반란에 대하여 확고한 태도로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즉 안전과 독립을 요구하는 대한정부의 시급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 반란사건은 한국문제가 토의를 기다리고 있는 유엔총회의 행동에 필경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경향신문, 1948. 11. 3).

계엄령은 순천에 대한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던 10월 22일 현지 사령관에 의해 처음 내려졌다.⁵²⁾ 계엄선포문에는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과연 누가 이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 어떤 근거에서 부여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채, 반도를 은닉하거나 밀통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처한다는 강도 높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중앙정부가 내린 것도 아니고 현지 사령관의 판단으로 자의적으로 내려진 이 계엄령은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⁵³⁾

국군이 순천을 완전히 점령하고 여수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기 시작한 10월 25일, 계엄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방장관 겸임) 그리고 11명의 장관들이 참가한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계엄령이 통과된 후 호남방면사령관은 26일자로 여수·순천지구에 임시계엄을 선포했다. 이 선포문은 군사에 관계 있는 행정·사법사무는 계엄사령관이 담당한다고 명시하였다.⁵⁴⁾ 22일 현지 사령관의 계엄령에 뒤이어 26일에 또 다시 군사령관에 의한 계엄령이 발표

51) 자유신문, 1948. 10. 27.

52) 계엄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엄령 선포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10월 22일부터 별명(別命)시까지 좌기(左記)와 여(如)히 계엄령을 선포함. 만일 차(此)에 위반하는 자는 군법에 의하여 사형 기타에 처함.

기(記) 1. 오후 7시부터 익조(翌朝) 7시까지 일절통행을 금함(통행증을 소지한 자는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함).

2. 옥내의의 일절 집회를 금함.

3. 유언비어를 조출(造出)하여 민중을 선동하는 자는 엄벌에 처함.

4. 반도의 소재를 알 시(時) 본 여단사령부에 보고하여 만일 반도를 은닉하거나 반도와 밀통하는 자는 사형에 처함.

5. 반도의 무기 기타 일절 군수품은 본사령부에 반납할 것. 만일 은닉하거나 비장(秘藏)하는 자는 사형에 처함.

제5여단 사령부 여단장 육군대령 김백일(사사키 하루다카, 1977, 『한국전 비사』 제1권, 병학사, 354쪽). 당시 계엄사령관은 송호성이었는데도, 계엄령을 김백일 제5여단장이 선포한 점은 당시 계엄령선포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편 사사키 하루다카, 위의 책, 354쪽; 대한민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1:해방과 건국』, 460쪽; 육군본부 전사감실, 1954, 『공비토벌사』, 부록1쪽 등에는 이 계엄령선포문이 10월 22일 이승만대통령이 선포한 것으로 잘못 적혀있다. 김석학·임종명, 1975, 『광복 30년』 제2(여순반란편)권, 전남일보사, 168쪽에는 10월 22일 오전 내무부, 국방부 관계자와 서울에 있던 국회의원들의 연석회의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이대통령에게 요청하여 22일 정오 계엄이 선포됐다고 나와 있으나, 이 또한 사실 파악의 오해이다. 최윤동의원의 국회보고에 의하면 22일 비공식적으로 위원장실에 모인 수 십명의 의원들은 국회를 급히 소집하고 내무, 국방위원들은 항시 대기하라는 의장의 말을 들은 다음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무부, 국방부 보고를 듣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다. 황희찬 내무부차관과 채병덕국방부 참모장의 보고를 들은 것은 23일이었다(『국회속기록』 제1회 제89차, 643쪽).

53) 이승만대통령은 10월 22일 "계엄령을 내렸다고 외국에서 전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령관이 내린 것은 해당지구에만 내린 것이다"라고 하여 계엄선포 사실을 확인했다(경향신문·동광신문, 1948. 10. 23).

54) 계엄포고문은 다음과 같다. "계엄고시 대통령령으로 단기 4281년 10월 25일 순천, 여수지구에 임시 계엄이 선포되고 따라서 해작전지구 일대내 지방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로서 군사에 관계있는 사항은 직접 본관이 관장하며 특히 군사에 관계있는 범죄를 범한 자는 군민을 막론하고 군법에 준거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이에 고시함. 4281년 10월 26일 대한민국 호남방면 군사령관(동광신문, 1948. 10. 28).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계엄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다. 계엄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무회의가 이를 '제정'하고 '의결'했던 것이다. 국무위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따라서 관보의 문구로 본다면 계엄령은 명백한 헌법위반이었다.⁵⁵⁾

여순지역에 계엄령이 발표되었지만, 일제시대에 있었던 계엄령은 조선에서 한번도 실제로 발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는 군 관계 인물까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다.⁵⁶⁾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계엄령선포 후 한 신문은 계엄령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돕기 위해서라며 계엄령을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제시기 계엄령의 내용 그대로였다.⁵⁷⁾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아직 계엄법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령 없는 계엄령 선포'라는 상황에 대해 국회는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를 추궁했다.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정부가 어떤 법에 근거하여 계엄령을 발표했는가하는 점이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계엄령이 분명하였으므로, 이는 헌법 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명령, 긴급재정처분'과는 다른 경우이므로 정부가 이 조문에 근거하여 계엄령을 발표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헌법 64조와 72조가 사용될 수 있는 헌법조문인데, 당시에 계엄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계엄령 발표의 법적 근거로는 사용될 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공포된 적이 없는 국방경비법도 문제이다. 미군정은 1948년 3월 17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하고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장 이승만은 7월 17일 이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도 같은 날 공포. 시행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에는 정부의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법령집을 보면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은 1948년 7월 5일 공포, 1948년 8월 4일 효력발생, 법률호수 미상이라고 써어 있다. 그러나 1948년 7월 5일에 이러한 법률이 공포된 일이 없다. 미군정은 군정법령(남조선과도정부법령) 이외에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창설한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법률'을 인준(認准), 공포한 일이 있으나 그것은 1947년 5월 6일 법률 제1호에서 1948년 5월 19일 법률 제12호(조선과도입법의원 해산)까지를 제정하였을 뿐이었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09호(법령 제173호의 개정)가 1948년 7월 3일에 공포되었고, 같은 법령 제210호(동결재산의 해제)가 1948년 7월 12일에 공포되었으므로 그 중간인 7월 5일에 다른 법령이 공포될 수 없고, 더구나 1948년 5월 20일으로써

55) 한편 여순지구에 내려진 계엄령 문구에는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었다. 11월 17일 대통령령 31호로 공포된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에는 "계엄사령관은 제주도 주둔 육군 제9연대장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56) 계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도 내릴수 없었다. 제주도에 계엄령을 발표하려 했을 때, 계엄사령관 자격을 갖고 있었던 송요찬 제9연대장은 "위에서 계엄령을 내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고 물었다고 한다(제민일보 4·3취재반, 1998, 『4·3은 말한다』 5, 전예원, 389쪽). 더욱이 여순지구 계엄령이 제주지역보다 더 먼저 발표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여순지구 계엄령에 대한 자세한 법적 규정은 진압군측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57)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동광신문, 1948. 11. 9. 메이지 15년(1882)에 포고되어 1913년부터 조선에 적용된 계엄령의 내용은 김순태, 1999, 『제주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72~174쪽을 참고. 동광신문은 이 법의 주요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이미 해산된(법률 제12호)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렇게 공포된 일이 없는 법률을 법률이라고 하려니까 그 법률호수는 '미상(未詳)'이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국방경비법을 법률인 양 적용했고, 군법 피적용자인 군인, 군속 등은 물론,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 제33조(간첩)의 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되었다. 국민들은 이것이 법률인 줄 속아서 살아왔고 허구많은 사람들이 그 법률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하는 유현석 변호사의 법조회고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방경비법'은 미군정에 의하여 '공포'된 일이 없고, 따라서 결코 '법률'이 아닌데도 대한민국정부와 법원에 의하여 정당하게 제정. 공포된 법률처럼 적용되면서⁵⁹⁾ 특히 한국전쟁기간 동안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처형하는 데 동원되었다. 이것이 만일 공포된 일도 없는, 따라서 법률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처형된 사람들은 참으로 무고하게 학살당한 피해자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방경비법'의 문제가 반세기전, 어처구니없는 한국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에피소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방경비법'은 국가보안법은 물론 '사회안전법'을 거쳐 보안관찰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인용. 계승되는 형태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국방경비법'에 의해 수십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남아 있고, 나아가 이들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족쇄를 채우는 근거가 되고 있다.⁶⁰⁾

58) '국방경비법'은 미군정 당시 조선경비대에 적용되는 군형법, '해안경비법'은 해안경비대에 적용되는 군형법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거의 같으며 실제로 많이 적용되어 사실상 군형법의 역할을 한 것은 국방경비법이다. 어쨌든 실제로 미군정에 의하여 공포된 일이 없으면서 미군정법률처럼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두 '법률'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국방경비법'이라고만 쓰기로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글에서 말하는 '국방경비법'의 문제는 '해안경비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방경비법의 내용은 陸軍本部, 法務五十年史(1996), 100-103쪽, 해안경비법의 내용은 海軍本部, 海軍法務五十年史(1996), 54-62쪽 참조.

59) 1962.1.20.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형법(법률 제1003호)과 군법회의법(법률 제1004호)을 제정. 공포하면서 그 부칙(군형법 부칙 제5조, 군사법원법 부칙 제8조)에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폐지하였다. 이처럼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군형법과 군법회의법이 공포될 때까지 군형사법의 역할을 하였다.

60)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국방경비법 제32조와 제33조 위반으로 복역한 사람은 보안관찰법 제2조에 정한 "보안관찰대상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 보장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 관하여는 UN Doc. CCPR/C/79/Add. 6, 25 September 1992;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r. Abid Hussain, submitted pursuant to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3/45. UN Doc. E/CN.4/1996/39/Add.1, 2 November 1995 참조. 이 글에서는 보안관찰법과 보안관찰처분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다루지 않고 단지 '국방경비법'의 문제점만 언급한다.

3. 유형별로 본 여순사건의 집단학살

여순사건과 관련한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대한 해방전후의 격동기 속에 해방후 계급적, 민족적 모순의 해결을 둘러싸고 외세, 지배세력과 민중과의 대립이 최고 수준에서 가장 적대적 형태로 폭발된 형태의 반군과 지방좌익, 빨치산의 무장투쟁에 대한 남한 정부의 토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토벌은 결국에 있어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으며,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로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이를 연대기별, 학살주체별, 피학살자별, 학살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민간인학살의 연대기적 양상이다.

여순사건의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반군에 의한 집단학살 시기와 진압군과 계엄 하에서의 집단학살 시기 및 토벌과정에서의 집단학살 시기, 그리고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학살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반군에 의한 집단학살 시기로 이는 국방경비대 14연대 반군들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약 3백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기간의 학살은 주로 경찰과의 교전 이후 여수와 순천과 같은 소위 해방구인 점령지역에서 지역 유지들과 포로로 잡힌 경찰들이 학살을 당하였다.

2) 진압군과 계엄 하에서의 집단학살 시기인데 이는 반군에 대한 초법적인 계엄령 발동의 진압과정에서 아군인 진압군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약 1만여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기간의 학살은 주로 무차별한 진압과정과 계엄하에서 자행된 집단학살로 무작위 다수의 민간인들이 이때 학살을 당하였다.

3) 토벌과정에서의 집단학살 시기로서 이는 진압과 계엄상황이 끝나고도 산악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긴 반군과 지방좌익에 대한 이른바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산악부근의 마을 민간인들이 피아간의 공방에 의해 학살을 당하였다. 그리고 이 토벌과정의 집단학살 시기는 한국전쟁기로 그대로 이어져 갔다.

4) 국민보도연맹원과 정치범에 대한 집단학살 시기이다. 여순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이 지역의 수 많은 좌익활동가들이나 정치범들에 대해 사상 전향을 종용했고 또한 대다수의 그들은 그에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거의가 집단학살을 당하고 마는데 여수 오동도 앞바다 애기섬의 150여명, 대전형무소의 여순사건 관계 정치범 1,300여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후반기의 대표적인 학살이다.

둘째는 학살의 주체로 본 유형으로 우익측에서는 국방군, 경찰, 우익단체 등으로 대별될 수 있고, 좌익측에서는 14연대 반군을 주축으로 지방좌익과 빨치산으로 대별 될 수 있다.

셋째는 피학살자들의 유형이다. 피학살자는 우익의 경우 군인, 경찰, 지역 유지인사들 뿐만 아니라 보도연맹원, 형무소 수감자, 제2전선 지역주민, 피난민, 부역혐의자, 공비 및 통비 혐의자, 불심검문 또는 가택수색에 의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는 거의 전 주민 다수가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넷째는 학살행위 유형별로 본 민간인 학살과 야만성이다.

학살행위의 유형에는 총살, 생매장, 초토화작전, 수장, 일본도에 의한 참살, 족창에 의한

척살, 굶어 죽이기, 때려죽이기, 폭격이나 비행기에서의 기총사수 등이 있다.

위의 여순사건에 대한 민간인 학살의 형태를 시기별로 대입하여 볼 때에 그 양상은 한국전쟁 전의 작은 전쟁기인 국지전 군인 봉기 시기에서부터 전면전의 형태인 한국전쟁 전기가지를 관통하고 있으며, 학살주체별 유형은 주로 진압군인 국방군에 의한 것이었으며 일부 반군과 지방좌익에 의한 것도 있었다. 또한 피학살자별로 본 유형은 부역혐의, 공비 및 통비 혐의 등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사건의 진원지인 여수를 비롯하여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일부와 곡성 일부까지도 학살 대상지역이었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학살의 행위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죽음의 형태를 총 동원한 인권 박물관과 같아 인권 유린 야만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여순사건의 민간인 학살은 그 근원을 빨치산의 원조 격인 14연대 반군의 무장 봉기에서부터 이야기되어야 하는바 지금까지 나타난 조사와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그 피해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순사건 지역 일대에서 여수지역 5,000명·순천지역 2,200명·보성지역 400명·고흥지역 200명·광양지역 1,300명·구례지역 800명·곡성지역 100여명으로 총 10,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학살의 주체는 국군과 경찰에 의해 9,500여명이었으며, 지방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율로 보면 95%의 절대 다수가 국군과 경찰이라는 소위 아군에 의해 학살 만행이 저질러졌던 것이다.

<여순사건의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발생지역	피학살지	피학살자 수	학살가해자	
여순사건 지역	여수	5,000	10,000 (지금까지의 실태조사를 통한 추정치 포함)	국군, 경찰, 반군, 지방좌익
	순천	2,200		
	보성	400		
	고흥	200		
	광양	1,300		
	구례	800		
	곡성	100		
계		10,000	국군 등 : 95% 반군 등 : 5%	

※ 출 전

1.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1집』
2.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9, 『여순사건 자료 2집』
3.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0,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3집』

이러한 여순사건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추려진다.

- ① 피학살 인원이 전남동부지역 총인구의 20분의 1에 상당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

② 명령 계통이 분명히 있는 의도적 학살, 조직적 학살, 준비된 학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점에서 여순사건의 학살은 계엄령이라는 초법적인 공간을 빌어 '국가 후원적 대량 살해' 범죄요 국가 테러리즘 그 자체인 측면이 컸다.

③ 동족에 의한 무고한 죽음, 죄 없는 죽음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여순사건 시기의 민간인 학살은 거의가 무고한 것이라 할 만했다.

④ 피학살자에게 '죄'가 있는 경우라면 남·북 정권 어느 일방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였거나 반대의 혐의 또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뿐이었고, 그것은 결코 '죽을 죄'는 아니었다. 따라서 그런 경우의 처형·'숙청'·살해는 단연코 불법적 조치요 억울한 죽음인데, 그런 유의 학살이 부지기수로 많았다.

⑤ 좌·우익 쌍방에 의한 동족학살의 본질은 '이데올로기적 학살' 또는 '정치적 학살'(politicide)이었다.

⑥ 좌·우익간 보복의 악순환에 의한 연쇄 학살의 양상도 많이 나타났다.

⑦ 어린이·노인·부녀자 등 방어 능력도 어떤 혐의의 여지도 거의 없는 약소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 학살이 자행된 경우가 많았다.

⑧ 학살 수법과 주검처리 방식이 매우 잔인하고 원시적이었다.

⑨ 어느 쪽이든 학살자(집단)들은 별 죄의식이 없이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를 꾀했다.

4. 맺는말

한국전쟁 전 대표적 학살극이었던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진압과 토벌과정에서 이뤄졌다. 여순사건은 4·3사건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 4·3사건에 대한 진압출동 명령을 받은 여수주둔 국군 제14연대가 1948년 10월 19일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14연대 병력 대다수인 2천여명의 군인이 참여한 봉기는 이 지역 좌익세력들이 가세하면서 순식간에 민군봉기로 발전했다. 그런 만큼 여순사건 진압에 나선 군경은 보복적인 테러, 학살, 약탈, 방화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관련자 색출작업은 야만적이었다. 전 주민을 학교 등 공공장소에 집결시켜 머리가 짧은 자, 군용팬티를 입은 자, 손바닥에 총을 든 흔적이 있는 자 등 외모로 관련자를 골라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즉석에서 곤봉, 개머리판, 체인 등으로 무참하게 타살하거나 총살했다. 당시 진압에 나선 제5연대의 김종원 대위는 백두산 호랑이라는 악명을 떨쳤는데, 중앙국민학교 교정의 버드나무 밑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즉결 참수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여순사건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전라남도 보건후생부의 이재민 구호자료는 당시 여수를 포함한 7개지역에서 2634명이 사망하고, 432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총 7,0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기록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피해실태를 조사하였거나 현재 조사하고 있는 피해 통계추정치인 10,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순사건 진압과 대량 학살을 겪으면서 봉기에 참여한 주력군과 좌익진영은 지리산 등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유격투쟁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전남동부지역 일대 8개시군 가운데 5개 군에서 유격전이 벌어졌고, 군·경은 남로당 게릴라 공비 토벌을 명분으로 49년 말부터

50년 초까지 무고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다.

여순사건은 기존의 정치 사회적 지형을 변화·강화시키면서 남한사회의 기본질서가 잡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여순사건이 일어난지 52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의 사실과 실체에 대한 규명은 아직도 요원하다. 52년이 지나도록 말 없이 묻혀있는 죽은 자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산 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 1948년이라는 같은 해에 일어난 '제주4·3'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실을 규명하고 있는 현재의 움직임과 비교하여 여순사건을 돌이켜보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순사건의 많은 사실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고의적인 축소와 은폐로 근거 없이 확대되면서 왜곡되어 왔다. 당시 신문은 사실 확인 없는 보도를 양산했고 이후 관련 기록들은 한쪽의 일방적 시각 밑에서 서술되었다. 여순사건 연구가 먼저 사실에 대한 규명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순사건은 통일정부수립의 좌절에 따른 분단정권 수립과 해방후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찰에 대한 반감과 식량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여순사건을 김구, 한독당 세력을 공격하고 소장파세력을 묶어두려는 정치적인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승만정부는 여순사건의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실상을 밝히기보다는 그 책임을 김구나 좌익세력에 떠넘기기에 바빴다. 정치적 반대세력과 체제 반대적인 좌익 세력을 동일시하여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지배세력의 인식(대응)은 이후 반공체제의 옹호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공식이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부 각료들은 국회나 사회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폭동이 발생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등 고의적인 거짓말을 반복했다. 북한의 폭동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고, 계엄법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엄령 발포는 헌법을 위반하는 사항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위협과 강경한 분위기 조성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조차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군 내부에서 봉기가 시작되었음에도 행정부의 책임은 전혀 추궁되지 못했고, 군경 갈등도 없던 일로 묻혀 버린 채 오히려 경찰 증원만이 논의될 뿐이었다. 이승만에 대항하던 국회 내 진보적 세력들도 공산주의세력의 계획적 폭동으로 몰아가는 언론 보도와 이데올로기 공세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여수와 순천이 진압된 뒤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학도호국단 등을 만들면서 반공체제를 확립해가기 시작했다. 이같은 정부의 대응이 불러일으킨 가장 큰 피해는 모두 민중에게 전가됐다. 여순사건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의 주민들은 '부역자' '빨갱이'로 몰리면서 슬한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강화되는 반공체제 앞에서 다른 목소리는 허용되지 않았다. 아무 근거없는 누명 때문에 국회의원은 빨갱이로 몰리고 검사와 학교 교장은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 이름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의 숫자는 아직도 알 수 없다.

이러한 여순사건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인식의 변화와 관점은 반공적인 관점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사건의 일체를 좌익활동과 연계하여 거의 절대적으로 불온시해 왔다. 이는 개인의 행복과 인권이 아닌 안정된 국가운영만을 중요시한 결과로서 당연히 반변혁적 입장을 취해 온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정부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국시로 내세우면서 일체의 비판적 반정부 활동을 소위 '빨갱이' 소행으로 매도하여 마녀사냥을 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민간인 학살의 경우에도, 좌익 및 부역 혐의와 지방 좌익의

극렬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선전해 온 것이다.

여순사건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이렇다 보니 그 피해자와 유가족은 지금까지 냉전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 혹은 민족 구성원으로 대접도 못 받으면서 죽은목숨처럼 생명을 부지해 왔던 것이다. 한반도 남한사회에서 빨갱이로 지목된다는 것은 전근대 시절의 천형과도 같았다. 빨갱이에게는 그 어떠한 처벌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처자들에 대한 유린도 용납이 되었으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도 반발이 없었다. 그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동네가 썩밭이 된 이후 가족들은 모두 빨갱이 홀어지고, 상처를 잊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철저히 침묵하면서 살아왔다.

광주 5.18의 경우도 그러했지만, 지금까지 여순사건의 민간인 학살의 역사에서 사망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불분명하고, 왜 이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에 대한 정부나 민간차원의 설명은 아직껏 제기되지 않고 있다. 사건이 53년이 지난 지금 학살의 직접적인 가해자들도 거의 사망하였고, 목격자나 피해자들도 거의 사망한 이 시점에서 이제는 가해자를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이들은 다만 사실 왜곡에 대한 진상을 바로잡자고 주장한다.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피해자의 영혼을 달래는 첫걸음이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거청산을 통해 전 국민적인 화해와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압력에 쫓긴 현지의 무리한 진압작전 실패의 후과(後果)가 지역 주민의 피해로 전가됐다는 점은 여순사건에서 가장 가슴아픈 측면임과 동시에 당시의 정부 태도에 대한 엄격한 비판이 필요한 지점이다. 진압군과 정부는 학생들이 반란에 열렬히 참가하고 끈질기게 저항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강경하고 탈법적인 부역자 색출을 합리화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한번에 목숨이 오고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지역공동체는 산산조각났으며 일반 민중의 마음 또한 분열되었다. 여순사건에서 나타난 민중억압의 양상은 여순사건 이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되었고 당시의 한 국회의원이 지적했듯이 파시즘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었다. 여순사건은 지역사회에서 출발했고 피해 또한 여순의 민중들이 직접 당했지만 그 성격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규정되었고 그 영향 또한 그러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현대사에서 국가폭력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왔고 재현되어 있었다. 제주4.3에서 여순사건, 한국전쟁, 베트남 민간인학살, 5.18광주민중항쟁, 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의문사 그리고 최근의 대우차 노동운동의 강경진압 사례는 국가폭력이 강도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끊임없이 길들여지고 맞들여짐을 알 수 있었다. 한반도 남한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올바른 신장을 위해, 국가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 국가폭력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도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다시는 이 땅에 여순사건과 같은 엄청난 불행과 죽음으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 사회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도 이제 국가폭력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만 한다. 소위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학살은 한반도 남한 인권문제의 시발점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여러 형태의 반인권적인 사례가 언급되고 있지만, 국가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주체에게 저지른 폭력, 그리고 정치권력에 의해 조장된 인종분규나 종족 갈등으로 인한 대량학살이야말로 말로 20세기 문명을 야만으로 떨어뜨린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600만명의 유대인을 집단 학살한 나치 전범들의 잔혹 행위에 대해서 뉴른베

르크재판과 유럽지역의 여러 재판은 이를 전쟁범죄로 취급하여 지금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비인도적 범죄자 처벌을 하고 있고, 남아공화국은 지난 1994년 350년간 지속되어 온 소수 백인통치를 종식키면서 폭력과 유혈로 얼룩진 과거 청산을 위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적 통합과 화해를 이룩해 나가는 예가 민간인 집단학살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보여진다. 국가폭력에 의한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일이야말로 노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 걸음이고, 이 첫 걸음을 회피하는 모든 인권 운동이나 인권 담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남한 인권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 도덕성과 사회 건강성의 회복을 위해,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제는 인권국가로서의 면모를 다지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경남지역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

전갑생 진상조사팀장
(민간인 학살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지역모임)

1. 머리말

경남⁶¹⁾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민간인들의 피해자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학살되었고, 누가 학살 책임자였는지, 왜 수많은 민간인들을 재판도 없이 총살이나 수장(水葬) 시켰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1960년도 국회의 양민학살 사건 진상특별위원회(이하 진상특위) 《양민학살사건 증언청취 속기록》과 각 지역의 유족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양민피살자 신고서》 등이 발견되면서 그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⁶²⁾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남의 민간인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대학살극이라는 점이다. 또 그 배후에는 최고의 결정권자와 지역단위 군·경찰·우익단체 등의 힘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사건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 민간인과 몇몇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 자행된 학살이라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지역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지만, 전체적인 사건 진상을 파악하는데는 역부족이라고 하겠다. 이에 모든 사건에 대한 기록은 다음에 미루어두고 간략하게 서술하겠다.

2. 민간인 학살의 전주곡

61) 경상남도의 행정구역은 지금과 다른데, 1950년 행정구역에는 부산시와 울산군으로 되어 있었다. 여기서 다른 지역은 다음과 같다. 마산시 창원군 진해읍 진영읍 통영군(거제도 포함) 고성군 사천읍 삼천포읍 거창군 협천군(지금의 함천군) 남해군 하동군 울산군 진양군 진주시 산청군 함양군 함안군 의령군 18개 시·군·읍이다.

62) 이 자료는 김기진 부산일보 기자와 함께 국회 본관 의안과 문서고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문서고에는 민간인학살 사건과 관련한 자료가 총 24권이며, 경북·제주도 지역만 있으며 경남지역은 빠져 있다. 제1~제20권은 경북 대구시·경주·경산·청도·영덕 지역의 피살자 신고서와 유족회의 청원서로 구성되어 있고, 21~23권은 제주도 지역의 피살자 신고서와 유족회 청원회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권은 1960년 양민학살사건 진상 보고서 및 증언 청취 속기록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7천여 쪽 가량 된다.

1) 정부의 자수 기간과 가맹주간 선전

1949년 6월 5일 국민보도연맹(이하 보도연맹)의 결성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전주곡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이 보도연맹은 “대한민국을 절대지지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박멸하기 위해서 과거에 좌익단체에 들었거나 좌익운동한 사람을 모두 가입시켜 일정한 심사와 교육을 받게 만든 단체”였다. 이 단체 구성원들은 좌익단체 인사나 ‘방조자’ 혹은 ‘협조자’까지 ‘자수’한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지역에서는 경찰서 사찰계나 우익단체 등이 각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맹원들을 모집하기에 이르렀다. 초기 단계인 1949년 12월 ‘자수주간’이 끝난 시점에서 발표한 정부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包攝溫情의 足跡, 轉向自首者 近四萬”

추치안국장은 자수주간이 끝난데 대하여 1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고 그 동안의 경과를 밝혔다. ... 지난 10월 25일부터 전향자수주간을 설정하였던바 예상외의 성과를 보았을 뿐 아니라 此의 恩典을 時日과 거리적 관계 등으로 當適化하지 못한 산간벽촌에 있는 범법자 등에까지 널리 관용케 하기 위하여 11월 27일까지 각 경찰국으로부터 내무부에 보고된 전향자는 서울 12,196명 경기 5,964명 강원 4,978명 충북 3,512명 충남 1,054명 경북 1,938명 경남 2,143 전남 215명 전북 1,660명 제주 5,283명 철도 143명 총 39,986명이다...⁶³⁾ 처음 자수기간(전향기간)에는 좌익단체 경력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겠다. 주요 자수자들은 인민위원회나 민전 산하 단체(농민조합·노동조합·어민조합·청년동맹·여성동맹·학생동맹) 소속 간부들이 대부분이었다. 다음 표는 경남의 자수자 현황이다.

경남 각 지역별 ‘전향’ 및 ‘자수자’ 현황

지역명	시기	자수 인원
마산	49. 11. 22. 현재	22명
	49. 12. 13. 현재	320명
	49. 12. 28. 현재	300명(중고등생)
	50. 2. 5. 현재	400명
진주	49. 11. 30 현재	259명
진해	49. 12. 1 현재	500명
진해 웅남 수원지	49. 11. 25 현재	300명
통영	49. 11. 11. 현재	60명
	49. 12. 28. 현재	188명
고성	49. 11. 19. 현재	8명
부산	49. 11. 17. 현재	622명

※ 《남조선민보》 1949. 11. 23~1950. 2. 6자 참조.

그러나 49년 12월 이후에는 각 단체 산하의 회원과 우익단체 간부까지도 가입하게 되어 급증하게 된다. 주요 가입된 사람들은 농민·노동자·학생들로 순수한 ‘좌익관계자’로 볼 수 없었다. 재차 정부에서 자수기간을 연장하여 자수·전향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한 인원은 다

63) 《남조선민보》 49. 12. 3.

음과 같다. “1949년 12월 30일 현재까지 경남 지역의 자수자는 합천 1,305명 산청 1,224명 보도연맹 경남도본부 626명 함양 325명 거창 271명 창녕 15명 밀양 88명 양산 51명 울산 288명 진주 259명(철서 자수자 3명) 하동 134명 사천 19명 동래 109명 수상 19명 부산 58명 북부산 58명(철서 자수자 5명) 김해 15명 진해 77명 고성 3명 통영 337명 거제 17명 남해 36명 총 5,33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⁴⁾ 한편 1949년 11월 10일 국민보도연맹 통영지부의 결성 이후로 경찰과 우익단체 중심으로 자수와 가맹 주간을 설정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보도연맹지부에서는 1950년 4월~5월까지 읍·면·리 단위를 포함하여 지역 민보단·경찰서 사찰계장 등이 직접 나서서 가맹원들을 모으고 있다고 연일 신문에 보도되었다.

2)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강요

경남의 국민보도연맹(이하 보련)은 1949년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결성되었다고 하겠다. 앞에서 말한 1949년 11월 10일 보련 통영지부의 결성과 동시에 경남 도본부 등이 속속 결성되었다. 1949년 11월 13일 부산 검찰청회의실에서 당시 서정국 검사장과 김동현 법원장, 정종철 부산시장, 최철용 경남도경찰국장, 지역 유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도연맹 경남도본부(당시 부산은 경상남도 포함돼 있었다) 발기대회가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1월 20일 부산 중구 대청동 옛 남일초등학교에서 선포대회가 열렸다.

경찰악대의 연주속에 800명의 보도연맹원 등 2천여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룬 이날 선포대회에서는 보도연맹 중앙본부 지방조직 책임자 이용록씨 등 연맹의 중앙간부들도 상당수 참석했다. 해방 후 인민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노백용씨가 도연맹 간사장을, 강대홍 성낙명 임순야 권일초 김필난씨 등 35명이 주요 조직책을 맡았다. 도연맹 명예이사장은 최 경남도경찰국장, 이사장은 신영주 경남도경 사찰과장이었다. 또한 마산지부의 결성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保導聯盟支部 結成 宣布大會”

국민보도연맹 마산지부 결성 선포대회는 7일 오전 10시반 시내 부림극장에서 과오를 뉘우치고 새출발을 맹세한 전향자와 각계 각중등학생 다수 참석하에 개최되었는데 먼저 국민의례에 이어 金順正 국민회 부지부장의 개회사 金鍾圭씨의 경과보고 金遺支部 푸락치지도원의 취지강령낭독 金도연맹위원장(대독)의 인사가 있는 다음과 같은 마산지부위원장 발표 서위원장 조이사장의 인사 안 마산여학교장의 축사가 끝나자 李吉雨 맹원의 답사 林相奉 맹원의 ‘나의 비판’의 열변이 있는 다음 만세삼창으로 폐회하였다.

●지도위원회 : 검찰지청장(위원장) 경찰서장(이사장) 위원 시장 창원군수 형무소장 경찰서 사찰계장

●상임지도위원 : 차석검사 경찰서사찰계장 간사장(미정, 이후 정인수) 사무국장 金鍾圭 총무부 鄭寅洙 보도부 金順正 사업부 金鍾信 선전부 崔光林 조직부 襄 재정부 朴良壽 부인부 미정⁶⁵⁾

64) 《民主叢報》 1949. 12. 3.

65) 《남조선민보》 49. 12. 8

그리고 마산과 이어서 대규모의 인원이 참석한 진주 지부의 결성 대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晉州保聯結成 大會, 轉向者 忠誠을 言警”

국민보도연맹 진주연맹 결성 및 선포대회는 예정대로 지난 8일 오전 11시 진주극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날 진주시내를 위시하여 진양군내에서 사상전향자와 자수자 천여명이 참대한 걸어갈길을 찾은 회색을 만면에 띠우고 조조부터 진주서정에 집합 질서정연해 대회장에 향하였다. 대회장은 각계각층 대표 관공서장 유지등으로 입추의 여지없는 성황을 일으킨중 회순에 따라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가 끝난다음 朴進煥(인민당 진주지부장) 개회사 姜斗錫 경과보고 도연맹원 취지강령낭독 좌기임원 발표 도연맹 간사장 인사, 李正용(일제때 순사부장, 진주경찰서장) 신임 이사장 인사, 朴進煥(간사장) 위원장 인사 孫太俊 맹원 대표 선언문 낭독후 토론에 들어가 사상전향자 趙墨欽 鄭仁洪 姜漢영 등 과오 반성과 민국(국가)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요지의 열변이 있는 후 진주시장 진양군수 국민회지부장 대한청년단장의 축사 만세삼창으로 오후 1시 폐회하여 시가행렬에 옮겼다.⁶⁶⁾

경남의 보련지부들은 50년 2월까지 읍·면·리·동단위까지 결성되었지만, 지역별로 적은 인원들이 가입하자 추가로 '가맹주간'을 선포하여 지속적으로 가입하라고 선전하기에 이른다. 특히 거제나 통영·마산 등에서는 '보도연맹 선전단'을 결성하여 읍·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가입을 종용하고, 직접 경찰서 사찰주임이나 지서 주임까지 동원되었다. 다음의 보도내용을 보면 가입해당자에 대한 자세한 요강을 알 수 있다.

“加盟週間 設置 未轉向者 加盟 促求”

보도연맹 마산지부에 공당계열의 전향 자수자가 매일과 같이 접종되어 문전성시를 이루어 다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금번 동지부에서는 아직도 가맹치않은 사람을 위하여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가맹주간'을 설치하고 자진가맹을 촉구하고 있는데 가맹해당자는 다음과 같다.

- 大韓民國會를 위시한 民族陣營 사회단체에 속한자로서 본 연맹취지 및 강령을 찬성함으로 가맹할 수 있음.
- 美蘇共委 마산시민축가 대회에 시민으로서 대열에 참가한 자
- 幕府 三和會議를 지지한자
- 10월 폭동에 의식 무의식적으로 가담한 자
- 민전 傘下 사회단체에 물자 및 금품제공 조달 협력자
- 민전 마산위원회 산하 단체에 적을 둔자는 원칙적으로 가맹하여야 함(단 반성 이탈하여 국민회에 가입한 자라도 가맹을 요망)
- 단체명 남로당(인민신민, 공산당관계자), 인공당 민청, 농조 민애청 여맹 민주학생연맹의 15 다수.⁶⁷⁾

참고로 통영·거제지역의 보련 인원에 대해 김병원씨(당시 하청민보단장, 사망)는 “보

66) 《남조선민보》 49. 12. 10.
67) 《남조선민보》 50. 1. 8.

도연맹 가입자가 1천여명을 넘었다.”⁶⁸⁾라고 하였고, 김재수씨(통영군 인민위원회 조직부장, 사망)는 “그때 통영경찰서 사찰주임은 통영과 거제도를 포함하여 보도연맹원이 2천명을 넘었다.”라며 “거제도지역은 1,500명쯤 될 것이다.”⁶⁹⁾라고 말했다.

또 유기봉씨(거제시 구조라리 거주, CICI 대장, 31공사 출신)는 “우리(CIC방첩대)는 거제도의 전 선박을 통제·압수하였다. 거제도로 건너오려는 주민들이 바다로 빠져 죽거나 총살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라고 술회하면서 “그 당시 거제도 주민 100%가 빨갱이었다. 또한 군경합동으로 관련자(보도연맹원)들을 취조하고 수사했는데, 그 숫자가 엄청났다.”라고 말했다.

경남 국민보도연맹 결성 시기와 주요인물들

지역명	결성시기	주요 내용
경남도	49. 11. 20	당일 선포대회에 800명 맹원과 기타 인사 2천명 참석, 노백용 간사장, 강대홍 성낙명 임순야 권일초 김필난씨 등 35명 주요 조직책, 도연맹 명예이사장 최철용 경남도경찰국장, 이사장 신영주 경남도경 사찰과장
마산	49. 12. 7	정인수 간사장, 지도위원(徐正均) 김찰지청장, 경찰서장, 경찰서 사찰계장등), 사무국장 金鍾圭, 총무부 鄭寅洙, 보도부 金順正 사업부 金鐘信 선전부 崔光林 조직부 裴麟 재정부 朴良壽
진주	49. 12. 8	朴進煥(간사장) 개회사, 姜斗錫 경과보고, 도연맹원 취지강령낭독 좌기임원 발표 도연맹 간사장 인사, 李正용 신임 이사장 인사, 朴進煥 위원장 인사, 진주시·진양군 사상전향 및 자수자 등 천여명 참석
고성	49. 12. 14	지도위원회 김기활 위원장(경찰서장) 盧企容(군수) 千載환 李相申 洪泰柱 金甲聲
통영	49. 11. 10	위원장 金璣擇 부위원장 朴世洪 沈鶴水 총무부장 河宋源 보도부장 河收仁 선전부장 金鍾奎 조직부장 鄭泰永
기타 지역 - 거제 49. 11. 동래 49. 12. 12 함안 49. 12. 12 밀양 49. 12. 14		

3) 학살 시기의 문제

경남 보련에 가입한 민간인들은 언제부터 희생되었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단번에 처리할 수 있었던 시기는 1950년 6월 한국전쟁 후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 각 지역별로 사례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지만 우선 전체적인 시기만 살펴보도록 하자.

첫 시기는 1949년 4월~1950년 4월쯤으로, 해당 지역은 거제·고성·울산·진주·산청·함양·창원 등지다. 이 지역은 야산대들의 주요 활동지로 비정규 군인과 군대 등이 '공비소

68) 증언, 1991. 7. 15.
69) 증언, 1991. 10. 1, 통영 자택에서.

탕'이라는 이름아래 민간인들까지 학살했던 것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50년 7월 29일~50년 8월 20일까지로 경남 전 지역에서 집단총살이나 수장 등이 행해졌다. 통영은 1950년 6월 15일~8월 18일 인민군 진주전후로 나누어 2회 동안 집단 총살과 수장이 이루어졌다. 1950년 7월 8일 당시 이유성(중령) 마산위수사령관과 김성삼(金省三, 대령) 진해군항사령관은 마산·고성·창원·통영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는데, 이 지역의 계엄령 선포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부에서는 송요찬 계엄사령관이 7월 12일 "필요에 따라 법원의 허가없이 보도연맹원을 예방구금할 수 있다"⁷⁰⁾ 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이유성은 7월 15일 보도연맹원 전원을 '예방구금'했는데, 해당 지역은 거제·통영·마산·창원 일부 지역이다. 송요찬의 발표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맹원들을 '예방 구금'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먼저 50년 7월 18일 장순원(姜淳元, 해군대위, 해군 진해통제부 정보 참모실 마산지구 파견대장)은 보련 맹원 구속에 대해 묻은 기자들의 답변으로 "군경 수사기관의 합의하에 비상사태에 대비한 조치인 만큼 이에 일기관(一機關)의 한 사람으로써 상세한 내용 발표는 할 수 없다" 라고 회피하였고, 같은 날, 이유성(마산지구 위수사령관, 육군 중령)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保聯은 不一內 善處”

마산지구 衛戍사령관 李裕成 육군 중령은 18일 내방한 기자단과의 회견석상에 있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보도연맹원 문제 - 구속된 자 중 극악질 자와 일시 남의 괴로움에 빠진 자가 있는데 우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2, 3일 내에 잘 처리할 것이다.⁷¹⁾ 앞의 이유성 마산지구 위수사령관의 말처럼 '2~3일' 혹은 '2~3주' 동안에 집단 학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유가족들의 증언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3. 학살, 그 잔혹한 사건

1) 거제

거제 지역의 민간인 학살 사건은 1949년 4월과 1950년 4월, 그리고 7월 25일 3차례나 이루어졌다. 1, 2차는 한국전쟁 전이라는 점인데, 그것은 거제지역의 야산대들을 소탕한다는 목적으로 백골·호림·백호·비호부대 등이 들어와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례라고 하겠다. 또한 일부 우익단체인 민보단과 CIC(육군 방첩대, 이후 특무대)·HID(헌병대)·G-2(해군첩보대) 등이 직간접적으로 학살에 개입하였다. 이에 사례별로 그 당시의 민간인 학살사건을 정리하였고 현지 유족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한 예로 사감에 의한 학살을 보여 주는 사례가 있다.

70) 《민주신보》 1950. 8. 2.

71) 《남조선민보》 50. 7. 19.

6·25동란을 전후하여 무고한 민간인 7백여명이 빨갱이로 몰려 죽어갔던 거제도-이 몸서리쳐지는 대학살을 저지른 주모자들이 사형 또는 30년의 장기형을 언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못되어 석방되고 그들은 과거의 죄상을 “내몰라”라는 듯! 갖은 횡포를 부리고 있는 사실이 유족들에 의해 폭로되고 있다. 30일 하오 거제군 사등면 성포리 정인선(鄭仁善, 39)여인은 만 10여년 전 억울하게 경찰에 끌려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죽음을 밝혀달라고 본사를 찾아와서 울며 호소했다. 같은 날 충무시 문화동 168 김용태(金容泰), 거제군 동부면의회 의장 윤응용(尹應容)씨도 본사를 찾아와서 당시의 학살자 거제군 동부면 산촌리 이채환(李采權), 강화봉(姜和鳳), 유기봉(柳基奉) 3명을 유가족의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고발하면서 참회없는 이들에 정의의 철퇴가 내려질 것을 강경히 요구했다. 김, 윤 양씨가 고발하는 내용에 의하면 6·25동란이 발생한 83(1950)년 8월 살인단체로 도민들을 공포에 몰아넣던 “동지회”의 동부면 지부장이자 민보단장인 이채환(48), 당시 거제경찰서 사찰주임 강화봉, CIC파견대 첩보원 유기봉(동부면 탑포리 거주)등 3명은 장승포읍 배삼식(裴三植), CIC거제군 파견대장 황창록(黃昌綠)과 공모하여 거제군 동부면 가베리 김영수(金榮洙, 당시 64), 그동생 김관수(당시 51), 장승포 박삼수(朴三守, 당시 50)의 많은 민간인들을 사소한 감정으로 “빨갱이”로 몰아서 거제경찰서 앞바다에서 총살하여 수장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성포리 정인선여인에 의하면 남편 박성환(朴成煥, 당시 31)씨는 6·25가 일어난 얼마 뒤인 음력 6월 2일 당시 사등면 부면장으로 있었던 남편이 거제경찰서로 불려간 뒤 그길로 학살되었다는 것이다. 남편 박성환씨는 스물아홉살 때부터 사등면 부장을 해왔었다. 경찰의 출두명령을 받고 당시 5·30선거를 마친뒤라 선거관계에 대한 문의가 있는가하여 부인과 함께 점심을 먹은 뒤 “버스”편으로 육십리나 되는 장승포경찰서로 향한 것이 결국 마지막 길이 되고 말았다.

정여인은 남편의 죽음은 당시 성포리 한청단장이었던 신용완(辛容完)씨의 음모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해방직후 신용완씨가 하청리에서 의사를 하고 있을 때 모 부락민과 싸워 동네에서 쫓겨난 일이 있는데 그때 남편 박씨가 통영에서 정모의사를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신씨는 그 보복으로 당시의 권력을 미끼로 음모를 꾸민 것으로 들었다고 한다. 당시 성포리 국민회장은 조흥갑(曹興甲)씨이며, 지서주임 주영홍(朱永洪, 지금 하동서장)씨였는데 이들에 의하여 부락민으로부터 모범청년이라고 칭찬 받아오던 남편이 학살되었다는 것이다. 정여인은 그의 남편은 경찰에서 의심받은 일도 없었고 좌익사상은 더구나 없었다는 것이다. 정여인은 남편이 떠난 해 세 살 나던 딸은 열네 살의 처녀가 되고 그해 난 아들은 열한살의 소년으로 자라고 있으나 아버지 없는 두 아이를 기르며 원한과 눈물, 그리고 분노의 나날을 보내오다가 이번 진정서를 꾸며 관계 요로에 발송하고 또 고발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태, 윤응용 양씨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살자들의 유가족들의 고발로 당시 부산계엄민사부의 조사결과 그 죄가 백일하에 폭로되어 고등군법회의에서 각기 무거운 유죄판결을 내렸던 이채환, 강화봉, 배삼식, 황창록 4명은 사형, 유기봉은 30년의 징역 언도를 내렸던 사실을 지적했다.

이들에 의하면 그 뒤 감옥 속에서 배삼식은 씻을 수 없는 무거운 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음인지 옥중자살을 하였고 황창록은 천벌을 받아 병사하고 이채환은 1년도 채못된 84(1951)년 9월 17일 “잔형면제”로, 강화봉은 85(1952)년 12월 4일 “형집행정지”로, 그리고 유기봉은 85(1952)년 3월 1일 “3·1절 특사”로 각각 석방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살인귀의 석방에 의아심을 품고 그 경위를 조사해 본 결과 이채환의 석방 뒤에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의 형 이채오(李采五)씨의 정치적 활동이 작용된 것이라는 것이다.⁷²⁾

실제 군대라고 하지만 그때 거제도에 들어온 것은 비정규 군대와 일부 마산주둔 부대였다. 그 당시 토벌대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회 양민 학살사건 조사단은 5일 경남도청 상황실에서 김해, 울산, 통영, 마산, 거제지구의 유가족들을 불러 하오 늦게까지 그들의 호소를 들었다. 이날 유가족들의 증언은 6·25전선이 가장 위태했던 83년(1950) 7월 군과 경찰의 “빨갱이”처치가 진짜 야산대는 살려두고 무식한 까닭과 사원(私怨)의 모함에서 수다한 생명들을 앗아간 실례를 들려주었다. 괴뢰군이 통영까지 치밀고온 당시의 거제도에는 20, 30명의 야산대가 구식총 몇자루를 들고 산골짜기에서 버텼다. 야산대 토벌에는 호림(虎林), 백호(白虎)부대들은 경찰을 앞장세우고 우선 부락에 남은 보도연맹부터 처치하기 시작했다. 미리 놀란 보도연맹이나 또 아니 민간인들은 산으로 숨어 억지 야산대가 되었고 이러한 야산대의 가족들이 끌려가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 거제도내 약 2백 명으로 추산되는 해변가의 총격과 산골의 소탕전이 끝난후 야산대장 윤병수(尹炳守), 이형도(李형도)는 여전히 섬내를 활보했고 “앵초(연초)”리 출신 윤해군대령의 동생은 사형연도의 집행이 중지까지 되었다 한다.

박남이(朴南伊, 여, 58), 옥말분(玉末粉, 여, 33) 등 여인들은 남편이 보도연맹의 낙인을 찍혀 총살당했으나 그들은 모두 인민위원회 명부에 속아서 도장을 찍었고 영문모르는 보도연맹이 되어 죽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무식한 농부와 어부들은 해방직후 국민회나 시국대책위원회나 인민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의 성격을 제대로 알 수도 없었던 것이지만 국민회에 도장 찍으라고 권유해서 손도장 하나 찍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것이다.

박달도(朴達道, 남, 31)씨의 부친 박삼춘씨는 국민회군당 회장까지 지낸 거제도의 우익지도자였다. 바닷가로 끌려간 그는 “개같은 놈 손에 못죽겠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바다에 몸을 던진 것을 총질 당했다. 그후 하도 억울한 유가족들은 김종덕, 이우조, 윤행일, 강화백(사찰주임)들이 장승포양조장에 모여 박삼춘을 없애자고 모의한 사실을 탐지했다는 것이다. 당시의 거제출신 국회의원 이채오씨와 한패인 그들은 거제에서의 선거기반을 더욱 굳건히 닦기 위해 경찰과 짜서 반대파 두목을 처치한 것이라고 유족들은 말했다.

역시 “빨갱이”로 몰려 총살당한 박성환씨는 보도연맹도 아니었다. 사등면 부면장을 지냈던 그는 재직 당시 의사 신용환씨가 칼부림 소동을 일으켰기에 다른 의사를 사등면에서 개업하도록 주선해 준 일이 있다. 신용환씨는 “박성환 이놈 안죽이고 마는가 봐라”고 욕설을 퍼붓고 돌아다니자 이 사태가 일어났고 경찰이 “5·30선거 관계로 물어볼 일이 있다”고 호출해서 마지막이었다고 한다.⁷³⁾

거제도의 학살사건은 6·25를 앞둔 그 전 해에 있었던 만큼 그 무법성과 악랄성은 다른 지역의 그것보다 끔찍하고 악의 선구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정규군인도 아닌 북한에서 남한한 일부의 청년으로 조직된 소위 의용공비 토벌대로 방금 정국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성주(金聖柱)불법사형집행사건”의 문제의 피살자 김성주가 살아있을 때 그가 영도하고 스스로 부대장이 된 호림부대와 마산 16(18?)연대에서 파견된 부대가 저지른 학살사건인 것이다.

72) 《부산일보》 1960. 5. 31.

73) 《국제신보》 1960. 6. 6.

4282년(1949), 6·25동란의 전해 지리산지구를 비롯해서 거제도의 깊은 산골짜기에 약간 의 공비출몰로 兩지구엔 치안이 흐려져 있었다. 당시 마산에 본거지를 둔 16연대의 일부가 거제도에 주둔하고 때를 같이하여 김성주가 인솔하는 호림부대가 연초, 동부등지에 주둔하여 공비 토벌작전에 임했다. 당시 그곳 도민들의 말에 의하면 공비들은 극히 미미한 수에 불과하고 그들의 무력도 보잘것없는 원시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기 양 부대의 전과라는 것은 수백명의 공산 “빨치산”들을 사살하였다고 국방부에 보고되었다고 신문에도 보도되었다. 실은 “빨치산”사살의 수는 미미한 것이고 그들의 전과를 올리고 과장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죄없이 사살되었을 뿐이다. 당시 사찰간부도 호림부대라면 벌 벌떨었다는 이 무시무시한 살인부대의 행적은 십여년이라는 세월 속에 매몰되어왔으나 이번 민주혁명을 계기로 그 최악의 일부가 드러났다. 여기 죽음의 거제도에서 천명으로 살아나온 수삼인의 이야기로 당시의 처절한 상황을 더듬어 본다. 현재 부산시내 초량동에 거주하는 백운삼(白雲三)씨는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연다.

“아름다운 사연이라면 오래 기억속에 남기고 싶지만 두 번 겪지 못할 흉악하고 몸서리치는 곤욕의 일은 쉬이 잊어 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무친 원한은 십년이 하루 같으니 딱한 일이기도 합니다. 생각하면 그때 꼭 10년 전 철이 이맘때였지요. 늦은 봄 감꽃이 한창 필 무렵 감꽃처럼 떨어지던 수많은 목숨이어서 사형수 36호는 죽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끝이 흐려진 백씨는 서글픈 웃음을 지으며 당시의 일들을 전설처럼 담담히 기억하고 있었다.

“오늘 총살예정자 20명” 누구의 입에선가 흘러……나 흐려지면 지독하게 맞고 먼저 총살당하기 마련이니 그럴 수밖에, 이윽고 좌수에게 아침 주먹밥이 나누어졌다. 사실상 마지막 먹는 사주밥이다. 오늘 20명이 총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여명이 수용되어 있는 두감방에 누구를 죽일 ……총살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때때로 사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호가 변경되고 “1번에서 40번까지 나오라” 죽음의 서열번호를 말하는 것이다. 40명은 일제히 감방앞 마당에 도열하고 포승줄(못줄)로 굴비두름 위듯이 묶여졌다. 누구도 말을 건네는 일없고, 잿빛 얼굴로 집행자의 일거 일동을 살필 뿐이다. 이내 출발명령이 내렸다. 그러나 목불인견의 고문으로 반죽음이 되어 숨만 붙어 있는 자가 형장까지 걸어갈 수는 없었다.

이래서 보행이라도 할 수 있는 자가 묶인채 이를 업었다.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이 길을 인도하고 모두가 그 뒤를 기진맥진하여 따르고 총을 멘 집행자와 시체를 처리할 부락민이 그 뒤를 이었다. 푸른 보리밭을 지나 개울을 건너 후미진 골짜기에다 달랐다.⁷⁴⁾ 또 다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희생된 사람들은 몇몇의 군인들에게 의하여 저질러졌다. 그 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74) 《부산일보》 1960. 6. 29.

● 구조라 주민들의 수난

이곳 거제에서 70평생을 전문수산인으로 살아온 강정태(구조라 거주)는 사랑하는 동생 정수씨(당시 21세)를 잃었다. 강씨는 공무원 어업조합 이사등을 거쳐 퇴직한 그날까지 항상 수산어업계에서 일해왔다. 그는 동생이 빨갱이로 몰려 무자비한 죽음을 당했다며 동생의 죽음은 순수한 민간인 학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치안이 허술해 밤만되면 산에서 빨치산들이 내려와 마을 청년들에게 남로당의 하부조직인 “민주청년동맹”에 가입하기를 종용했다. 또 양식을 빼앗아 가는 등 갖은 일들이 일어났다.

한편, 경찰은 경찰대로 낮에 형사들을 보내어 주민들에게 빨치산들의 행적을 대라고 엄포를 놓았다. 특히 강씨의 동생인 정수씨는 집안가족들이 거의다 우익에 몸을 담고 있다보니 자연 빨치산들에게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야밤에 산에서 내려온 자들은 부모와 형제들을 살리고 싶으면 “민청”에 가입하라고 협박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위장가입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보아넘길 경찰들이 아니었다. 형사들이 들어와 그를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죄과가 나오지 않자 하는 수없이 그를 풀어주고 말았다. 낮과 밤을 번갈아 가면서 구조라주민들은 끊임없는 고통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1950년 4월 근처 동부면 구천에 주둔해 있던 육군 백골부대(부대장 김종원)의 군인 60명이 구조라로 들어왔다. 그들은 마을로 들어다치자마자 마을입구 두 곳을 완전차단하고 일체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그리고는 이 마을 구장인 노길필(80, 당시 41세)씨를 불러세웠다.

“구장, 오늘부터 우리 부대가 이곳 지역 야산대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였으니 지금부터 60명의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라.”며 한 장교가 명령했다. 그러나 노씨는 기가막혀 고기를 잡아 근근히 살아가는 어민들에게 무슨 수로 60명의 밥을 끼니마다 지을 수 있겠느냐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 그 장교는 화를 내며 노길필씨를 칼빈총 개머리판으로 사정없이 내리쳐버렸다 한다. 노씨가 “옥”하고 쓰러지자 옆에 서있던 군인 서너명이 달려들어 반죽음을 시켜버렸다. 이 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은 새파랗게 겁에 질려버렸다.

“이 새끼 국군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보니 이곳에 빨갱이가 많구만”하며 “지금부터 하나도 남김없이 빨갱이를 찾아내라”고 그 장교가 말했다. 근근히 몸을 일으킨 노씨는 하는 수 없이 쌀을 구해 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서야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밥을 해서 들고 갈땐 바로 서서 가지못했습니다. 허리를 90도 각도로 숙이고 밥을 나누어 주었지요” 당시 공포에 쌓였던 마을 분위기를 정행길(72, 구조라리, 당시 33세)씨는 증언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보유한 곡식을 모조리 거두어 백골부대 군인들의 밥을 해주고 수발을 든지 거제 1개월 후인 50년 5월 6일이었다. 군인들은 주민들을 마을앞 해변가로 끌어내었다. 워낙 악독하게 주민들을 괴롭혀온 그들이 마을주민 전체를 모이게 하니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또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있던 주민들도 모두 모이라며 회항을 명령했다. 그래서 울보막 앞에 모두 모였다. 한 장교가 “너희들 속에 빨갱이가 숨어 있다. 그동안 자수하기를 기다렸는데 도저히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오늘 너희 모두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울보막 앞에는 1천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 앞으로 다가올 사태에 대해 불안한 기색을 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어장막에 감금되어 며칠동안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했으며, 좁은 공간에서 온갖 냄새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그 다음날 “막 모여 있는데 앞 산등성이에서 군인 4~5명이 3명의 청년들과 산을 내려오

고 있었지요. 한 군인 ‘야 빨갱이를 잡아시오’ 하면서 손을 들어 보이며, 5명의 청년들을 총부리를 대며 질질 끌고 내려오는 것이었지요” 당시 상황에 대해 정행길씨는 손과 입을 떨면서 말문을 열었다. 주민들은 모두 죽었구나 하면서 더더욱 불안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부터 군경찰가족 10세미만 어린이 임산부를 제외한 다른 주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간다. 만약에 불응하는 자는 빨갱이로 간주하여 총살하겠다.”고 그 장교는 말했다. 주민들은 차가운 물도 아랑곳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주민들은 1천여명이 물속으로 뛰어들자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 또 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탕탕탕” 총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가 “옥”하면서 물속에서 뒹굴었다. 정덕용씨였다. 군인들은 주민들이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자 이제부터 두줄로 서서 두사람이 마주보면서 뺨을 때리기를 시작한다. 실시!” 하는 구호가 떨어졌는데 주민들이 엉거주춤하자 군인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총을 쏘며 빨리하도록 강요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살려면 하는 수없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과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남녀노소 구분없이 사정없이 때리기를 강요했다.

그 악몽은 한 10여분 동안 진행되었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모이라고 하여 얼마전에 산에서 잡아온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장교는 “여기 청년들은 야산대 즉 빨갱이여, 이 놈들이 마을청년이란 것 다 알고 있어”하며 “마을놈들 보니 완전히 빨갱이 소굴이 구만” 하면서 그 자리에서 5명의 청년들을 총살시켰다. 그 장교는 똑바로 눈을 떠서 보라고 하자 고개를 돌리는 사람에게 일본도를 뽑아서 위협하며 쳐다보도록 했다. “이제 빨갱이에게 협조하는 자들은 이런 꼴 될줄 알아”하면서 구조라국민학교로 퇴각했다. 그 당시에 일주일만에 모진 고문과 허위자백을 받아서 총살당한 5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노길만, 강정수, 김상목, 강정엽, 노길찬(노재경의 숙부) 등이며, 장승포 일본인 신사터에서 총살당한 강간두, 김태일, 강정길 등이다. 또한 구조라 국민학교 교정에서 총살당한 임옥성, 강명용, 둔덕 사람 1명, 노국현의 아들, 전언봉 등이다. 이에 구조라 출신을 포함한 주민들은 총 13명이 총살당했다.

● 그 외 거제지역의 학살사건

동부면 구천마을에 주둔하고 있던 백골부대는 동부면 평지마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마을과 붙어 있는 노자산에는 잔병 빨치산 대원들도 활동하던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장승포 옥녀봉과 국사봉과 연결되는 빨치산 대원들의 거점지역이라고 하겠다.

이관범(72, 평지 거주)씨는 “노자산 부근에서 일명 빨치산 대원 20~30여명의 청년들이 활동하였다.” 라고 말하고 “1949년 4월 그들을 토벌한다고 호령, 백호부대가 구천 마을에 진주했다. 그러면서 마을의 유지들은 이제는 살았다며 한숨 놓았다고 까지 말했다.”⁷⁵⁾ 하지만 비정규 군인들의 진주에 따라 동부면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씨는 “대부분 서북청년단원이며, 동부면 산양, 평지, 구천 마을 청년들을 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라고 겁먹은 표정을 지으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토벌대원들은 인근 마을에서 잡아들인 청년들을 야산대원과 관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선량한 청년과 민간인들이

75) 증언 1991. 1. 23.

었다. 특히 보도연맹에 강제로 가입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학살당한 청년들은 야산대원에게 된장, 고추장, 쌀 등을 주었다는 이유로 죽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 당시에 총살당한 사람들은 100명 정도인데 구천계곡에서 집단 총살당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했다.

또한 거제 둔덕면 산방산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산방산은 일부 빨치산 대원들이 활동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은 통영 한산도와 가까운 곳이며, 해방후 젊은 청년들의 사회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곳이다. 이 지역의 신옥근(둔덕거주, 당시 면장)씨는 “둔덕면 산방리 산방산에서 조바풀이라고 불리는 곳에 야산대원 토굴이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백골부대와 지역 민보단 등이 토벌작전을 함께 펼쳤습니다. 그때가 50년 4월쯤이다. 그때 마을 주민과 청년 등 10여명이 집단 총살당했는데, 그들은 야산대원도 있었지만, 대부분 보도연맹에 강제로 가입된 사람들이었다”⁷⁶⁾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하청면 하청리 소재에 있는 하청중학교에는 1949년 4월~1950년 4월까지 호림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청, 연초면 지역의 청년들을 강제로 검거하여 ‘빨갱이 색출’작업을 벌였다. 그 당시 김옥문(69, 당시 토벌대원)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토벌대가 49년부터 50년 여름까지 하청중학교에 주둔을 하면서 청년들을 동원하여 토벌을 벌였다. 여기에는 민간조직으로 이장 중심의 민보단을 조직하여 토벌에 적극 동조했다. 그런데 어느날 토벌군이 학교로 청년들을 집합시켜 ‘요즘 토벌이 시원찮다’며 군인들이 마구 몽둥이로 오뉴월 개 패듯이 맞았다.”⁷⁷⁾ 그 이후로 청년들은 야산대원이든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느껴지는 청년들을 잡아 토벌군에게 넘겼는데, 그 당시 토벌대에 소탕된 청년 40여명이 집단 총살되었다는 것이다.

하청면 유계마을에 살던 윤태진(유계거주, 농부)씨는 “그때가 49년 7월쯤이다. 하청중학교에 호림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송정리 뒤산에서 청, 장년 약 20~30명을 집단 총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부분은 선량한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야산대원이 아닌 보도연맹에 강제로 가입되었던 청년들이었다”고 말했다.

1949년 봄 하청중학교를 본부로 주둔한 백골부대는 이튿날부터 좌익관련 인사들을 색출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그 가족 및 친지들을 억박질렀다. 군인들이 이곳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약 20여일.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는 부녀자들은 물론 남정네들도 발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 하루하루를 불안속에 지내야 했다. 급히 해야할 일이 있어도 아예 집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어떤 트집을 잡혀 빨갱이로 몰리기가 겁이 났기 때문이다. 주둔군들은 이곳에서 부녀자들을 회롱하거나 민간인들의 재산을 수탈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민간인들을 무고하게 괴롭히고 병들게 했다고 생존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하청면 서리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1백여 석의 농사를 짓고 있던 부농 윤씨 집안은 집안의 장손 윤모씨(당시 25세)의 아들이 좌익활동을 한다며 산속으로 들어가자 매일 주둔군들에게 자식의 출처를 강요받아야만 했다. 처음에는 신사적이던 군인들은 차츰 시간이 지나자 무자비한 구타를 하며 적극적인 고문에 나섰다. 윤씨뿐만 아니라 그의 며느리까지 불러들여 연 10일을 몽둥이로 패다가 고춧가루를 먹었다가하는 모진 고문을 계속했다. 이 때문에 윤씨는 노이로제가 걸려 반 미쳐버렸다.

“다라에 있다” “오늘 아침 마산에 갔다”는 식으로 몽둥이가 무서워 이리저리 둘러댔다.

76. 증언, 1991. 1. 20.

77. 증언 1991. 1. 28.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한 군인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더욱더 심한 매질뿐이었다. 이후로 하청일대에서는 “OO는 빨갱이 소리만 들어도 미친다”는 말이 널리 퍼졌다. 실제로 윤씨는 이북 이야기가 나오면 반 미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결국 윤씨는 그때의 고문으로 몸을 상해 그후 몇 년동안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인간이 되어 고생만 하다가 저 세상으로 갔다.

당시 이곳의 사정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빨치산이 된 좌익들의 극성이 대단했다. 연일 밤이면 안면있는 청장년들을 동리 포강에 끌고가 좌익에 협조하라며 괴롭혔다. 그때 그들의 괴롭힘을 못이겨 인장을 찍은 사람들은 일부 빨치산 지도자들이 체포됨으로써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다. 생존주민 심모씨(79)는 자신이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8명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매일 하청을 비롯 장목·연초등지에서 혐의자들을 잡아들이는데 밤이되면 수십발의 총소리가 들리고 다음날 아침 무고한 양만 한두명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한다. 자신과 친분이 있던 신인규씨, 신명구씨등 많은 사람들이 이유없이 죽어 갔다는 것이다. 신인규씨는 정말 어이없는 죽임을 당했다 한다. 당시 그는 35세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예수믿고 착실한 사람인데 절대 빨갱이짓 안했심미다” 좁은 동네라 “누가 좌익이고 누가 우익인지 훤히 안다”는 증언자 심씨는 신씨의 죽음이 담배 한 개비 때문이었다고 전한다.

신씨가 죽음을 당한 이유는 좌익혐의로 체포된 친구에게 담배를 건넸다가 군인들에게 적발, 비밀누설죄 및 좌익동조세력으로 몰려 처형됐다는 것. 부두에 끌려가 처넣었다 꺼냈다하기를 수십번 당하고 난후 하청중학교 임시 감옥에 수감된 친구의 측은하기 작이 없는 초라한 모습을 보고 당시 면서기였던 그는 아무런 생각없이 피우던 담배를 전하다 이유없이 죽어갔던 것이다. 이때는 전쟁중도 아니고 또 빨치산들이 무기를 들고 저항도 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후방교란과 소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는 게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생존주민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좌익세력야 사상대립으로 어쩔 수 없이 희생되어야 했지만 그 가족들이나 무고한 민간인들에게는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조사를 끝낸 후에 처벌을 했어야만했다는 것이다.

하청·장목·연초 일대에서 잡혀온 20여명의 좌익세력과 10여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은 하송에서 옥포로 넘어가는 송정 고갯길 언덕에서 총살당했다. 이들 또한 스스로의 무덤을 파야했고 그 구덩이에 내 던져졌다. 친지들도 부역으로 끌려나가 부모, 자식, 형제들의 시신을 직접 처리해야만 했다. 자식의 죄를 뒤집어쓰고 모진 고초를 당하던 순박한 농민 중에 웃지 못할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이 있다. 하청면 실전에서 농사일을 하던 이모씨. 이씨는 살아 생전에 몹쓸 놈의 자식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며 녀두리 했다한다. 나라에 반역하는 무리들과 어울려 분탕질이나 해댄다며 자식을 몹시도 원망했다. 하청중학교에서 취조를 받고 3일간 그는 물한모금 입에 대지 못하고 생전 처음으로 지옥을 경험했다. 허리꺾기, 몽둥이 찢질, 물고문 등 저승이 왔다갔다하는 고초를 겪은 그는 사안에서 실전으로 넘어오면서 고갯길 한켠에서 들로 자신의 성기를 잘랐다. 그것이 못된 아들을 생산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처럼 우직하고 양순한 농민이었다.

연초보도연맹사건은 다른 지역과는 색다른 유형이다. 49년쯤(오기 46년 10월) 정부의 보리수매공출에 반발한 농민들의 집단 항의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에 보도연맹원들이 대거 양산되었다. 사상에 의한 좌익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 어쩔수 없이 빨갱이가

됐고 또 좌경으로 몰려 버렸다. 당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출에 반대하는 농민시위 속에 좌익세포가 암약 활동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늑속으로 빠져 들어갔는 것이다. 또 사찰기관과 CIC측은 매로써 보도연맹가입을 강요했고 도장을 찍으면 풀어준다고 회유책을 써 보도연맹원을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당시 '씨아씨(CIC)은다' 하면 산천초목이 떨고 울던 아이도 조용했다며 무서웠던 군 정보기관에 대해 곧잘 이야기하곤 했다.

형이 보도연맹위원장을 하면서 극렬투쟁을 벌이는 바람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이 있다. 연초면 연초리에 거주하던 당시 35세이던 손재철씨. 형 손재원씨가 세포활동을 하면서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경찰서에 불려다녔다. 조사하던 경찰은 10여회의 취조 끝에 혐의를 풀고나서는 형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러나 빨치산이 된 형이 자신에게 행방을 알려줄리는 만무한 노릇이었다. 그래도 뒤에 진주한 군인들은 계속해서 그를 다그쳤다. 아침에 왔다 갔다 밤에 와서 양식을 퍼갔니 하며 고문에 고문을 계속했다. 20여일을 옥박지르던 주둔군이 49년 5월 어느날 그를 데리고 하청쪽으로 간 뒤 손씨의 모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 송정고개에서 처형돼 산속에 묻혀 버렸다고 생존자인 윤맹호씨(72, 연사거주)는 증언하고 있다. 전쟁발발 직후에는 유연비어 유포 혐의로 수장된 사람들이 있다. 당시 충무에서 공무원을 하던 윤병삼씨와 윤창구씨. 인민군이 곧 들이닥친다는 소문에 급히 피난을 온 두 사람은 친척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며 멀리 이수도쪽으로 피난을 권유했다. 이것이 유연비어 혐의에 의한 처형 이유가 됐던 것이다.

또한 김숙용씨(77, 신현읍 고현리 거주)는 형남(김만용)을 잃었다고 했다. 그는 "전쟁이 바로 터진 이후로 마산형무소로 끌려가 수장 당했다" 라고 했다. 그는 같은 마을 청년들도 보도연맹원이라고 해서 거제경찰서 형사들이 와서 끌고가 수장시켰다고 말했다. 그들은 신현읍 수월리 제산 마을의 김주란, 김주임, 김주배, 정국수, 김극린, 김주홍, 정한기, 정봉기, 김낙윤의 6명, 해명 마을에 옥원석, 손문찬, 변중도의 7명, 저산·양정 2개 마을 주민도 각각 20여 명쯤 되었다.

● 국회진상 조사에서 증언한 사람들

1960년 6월 5일 경상남도지사실(회의실)에서 진상조사단은 거제 지역의 유족들을 불러 학살 사건을 들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원장(崔天) : 그러면 다음분

(증인 尹炳漢 朴幸道 兩人 宣誓) : 그러면 그때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증인(윤병한) : 저 자신은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나 들은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최천) : 그래 말해보세요.

○증인(윤병한) : 처음의 학살사건이 계획된 것은 82년(1949) 4월입니다. 사변전에 虎林부대 白虎부대라는 군대가 주둔했습니다. 그때에 거제도에 빨갱이라고 해서 좌익계열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결국 해방후에 멋도 모르고 囚章을 찍어라 하기 때문에 찍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멧을 잡아 죽이고 총살을 하니가 거기에 인장찍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산에 피하고하니 아들이나 남편이나 잡아 오라해서 잡아다가 죽였는데 20명 10명 민간으로서 확실한 수자는 모르겠습니다. 풍문에 들으면 한 2백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朴相吉위원 : 현재까지 나타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증인(윤병한) :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사변후의 것과 사변전의 것이 40명 됩니다.

인민군들이 이쪽으로 쳐들어 왔을 때에 거제도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 농민들이니까 인장을 찍으라고 그래서 인장을 찍었더니 보도연맹에 가입시켰던 것인데 CIC, HID 사람들이 들어 와서 물론 경찰사찰계와 대개 그런 것을 했는데 다 모이라 거기에 가세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끌려 나간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된 셈인지 열사람 다섯사람씩 鐵絲로 묶어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최천) : 군대가 와서 끌고 갔는가요?

○증인(윤병한) : 대개 끄러가기는 형사들이 끌고 갔습니다.

○위원장(최천) : 거제도 야산대가 수가 얼마나 되었어요?

○증인(윤병한) : 처음에는 수도 많지 않았는데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죽이려고 하니깐 산으로 쫓겨 올라가고 했습니다. 수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죽었습니다.

○위원장(최천) : 야산부대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증인(윤병한) : 야산부대에 부산에 와 있던 사람이라든지 서울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빨갱이라고 해서 잡아서 죽였습니다.

○박상길 위원 : 그때 죽인 사람은 군대인가 경찰인가?

○증인(윤병한) : 제1차는 군대입니다. 육군입니다. 호림부대 백호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사단 몇연대까지는 모릅니다.

○증인(朴幸道) : 그때 18연대가 마산에 있었습니다. 그부대에 김휘송(김휘중?) 소령이 전투사령관이었습니다. 그외에 호림부대 백호대 猛虎隊 이런 부대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산대 대원이 2,30명 가량 제가 추측합니다.

○위원장(최천) : 무기를 가졌는가?

○증인(박행도) : 무기를 가진 야산대가 있었습니다. 구식무기, 멧기 같은 것은 있었습다. 그때 야산대 대원중에도 안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윤대령의 사촌동생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셈인지 사행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그외에 거제도에 그 당시에 사형을 당한 사람중에 야산대 대원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확실한 수자는 모르지만 백여명이나 될 것입니다. 저희 부친 박상수씨가 죽었습니다. 그때 장성포(장승포)주둔하고 있던 부대가 HID, CIC, 해군 G-2입니다.

○위원장(최천) : 巨濟同志會라는 것을 압니까?

○증인(박행도) :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친을 죽인 사람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정부에서 저희 부친이 죽을만한 죄가 없는데 죽었습니다.

○위원장(최천) : 어떤 모략으로 죽었어요?

○증인(박행도) :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박상길위원 :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요?

○증인(박행도) : 그때 모략 중상한 사람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우조라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몇은 과거에 左翼思想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부친을 없애야 자기들이 세력을 잡을수 있다 해 가지고 술도가에서 '김종득' '이우조' '윤형일(윤행일)' 등이 모의를 해서 일을 꾸민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어머니한테 HID에 있는 知人이 와서 영감이 죽을지 모르니 이우조씨한테 찾아가서 의논하라고 그래서 모친이 이우조씨를 찾아가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벌써 시기가

늦었다고 하면서 HID의 성낙현, CIC대장 유기봉, 사찰계주임 姜和鳳을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위원장(최천) : 告訴했소?

○증인(박행도) : 아직 고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최천) :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왜 법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지않느냐 말이에요

○증인(박행도) : 모든 마음의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 증인의 아버지되는 분은 경찰과 군인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미운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세력을 갖게된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증인(박행도) : 저의 아버지가 右翼應櫻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6.25사변이 발발되자 장승포 박삼수를 없애므로써 우리가 세력을 확장시킬수 있다고 하는 견지에서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 그러면 여러분이 처벌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증인(박행도) :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조사해서 고발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 합법적으로 죽었습니까?

○증인(박행도) : 전혀 없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 군법회의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박행도) : 김영수라는 사람이 헌병대에다가 자기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簡易裁判을 했습니다.

○위원장(최천) : 제씨가 무엇 때문에 잡혀갔어요?

○증인(潘聖彩) :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처음에 잡혀간 동기는 6.25때 돼지를 잡아먹는데 경찰 한분이 오는데 어떤분이 계시다가 저게 누군가 이렇게 했는데 경찰국 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어찌 그런거 하니깐 춥고 배고푸니까 울것이 아니냐 한다리 주자 이렇게 6,7명이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收拾對策委員會 國民會에 한사람인 동네 사람이 지서에 가서 거기서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했어요.

○박상길 위원 : 누가와서 붙들어 갔습니까?

○증인(반성채) :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박상길 위원 : 누가 부르러 왔습니까?

○증인(반성채) : 순사가 데리러 왔습니다.

○박상길 위원 : 이름 압니까?

○증인(반성채) : 모르겠습니다. 모순경이 뜨드러가지고 8명이 무조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춥고 배고푸다 한다리 주자 하는 것을 불이라고 때려서 얼혀왔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다시 호출장이 있어서 단가에다가 신고 갔는데 경찰서하고 최고의 민간단체로서는 국민회시국수습대책위원회 분자들이 같은 세력으로서 배삼식이 세력의 반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승포에서 세사람이 갔는데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모의한 것을 갖다가 나는 반대했다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때 책임자가 도의원 김종찬씨인데 국민회 회장이고 수습대책위원입니다. 그분들이 모의했다는 것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김상길 위원 : 자유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증인(반성채) : 자유당입니다.

○박상길 위원 :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증인(반성채) : 장목면서 열다섯명이 죽었는데 사변직후에 군대에서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5촌도 그래가지고 죽었고 저 여자 남편도 그래가지고 죽었고 한데 한 15명중 5명 정도는 범으로서 처단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하등 죄가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 15명이 죽은 것과 김종찬이와의 관계는?

○증인(반성채) : 김종찬씨가 모의를 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형님과 아저씨가 죽은 것은 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을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 제사건으로다가 장승포로 잡혀갔다니까요.

○박상길 위원 : 그러면 도의원한테 한이 많겠군.

○증인(반성채) : 네

○박상길 위원 : 이 사건이후에 한번 만나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까?

○증인(반성채)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동생한테 노의 형님이 같은 사람으로서 일을 했으니까 참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한적이 있습니다.

○증인(김종백) :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부친이 죽었습니다. 성함은 김태곤입니다. 그 당시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부친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가 알기에 아무런 사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위원장(최천) 인민위원회 위장을 하지 않았소?

○증인(김종백) : 네.

○조일재 위원 : 여하튼 빨갱이라고 낙인을 찍힌 사람이라 보련이라 이것은 그때 방침이 그랬든 것이예요.

○증인(김종백) : 저는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호소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빨갱이로 죽은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해명해 달라는 것이예요. 제가 취직하려고 하면 너는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949년 4월과 1950년 4월, 7월 25일 3차례 죽어간 민간인들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1950년 4월 일운면 구조라 주민 13명 집단 총살 △49년 4~5월 10여 차례에 걸쳐 동부면 구천계곡에서 310명 집단총살 △50년 4월 둔덕면 방답에서 10명 집단총살 △50년 4월 장승포 신사에서 20명 총살 △50년 7월 25일 지심도에서 400명 수장 △1949년 4월, 50년 7~8월 하청.연초지역에서 보도연맹원 40여명 집단총살 △49년 7월 연초면 송정리 뒷산에서 20~30명 집단총살 △50년 7월 장목면에서 보도연맹원 15명 집단총살 △50년 7월 칠천도 부근에서 40명 수장되었다. 1949년 4월~1950년 7월 25일까지 민간인 학살자 수는 총 878여 명쯤 된다. 1960년 국회 조사에서는 44명(유족측 200명), 1989년 거제경찰서 조사 400명 등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 통영지역의 민간인 학살 사건

통영지역의 민간인 학살은 거제지역과 유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은 해안과 인접하고 있는 곳이라 수장되거나 즉결 처형되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중에도 바다

에 수장시키는 방법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통영의 학살시기는 1950년 8월 14~15일과 1950년 8월 17일~22일까지 두 차례로 나누어졌다. 또한 학살의 책임자로 보여지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군대와 군정보기관(CIC·HID·G-2) 그리고 우익민간단체(대한청년단 등)들이다. 특히 헌병대에서 문관으로 있던 이양조(본명 이판석, 수석 문관)씨의 10명 등이다. 먼저 개인의 감정에 의하여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내도 믿을 수 없었던 11년전 단하나의 아들을 며느리의 욕정의 제물로 잃고 충무시 명정동 303 가난한 딸집에 여생을 기탁하고 있는 옥금수(65)노파는 “이 원통함을 시민에게 알려주오 살기 싫으면 그냥두지 내아들을”하고 저주와 비분이 뒤섞인 말로 아들의 죽음을 통분하고 있다. 옥 노인의 외아들 이화도(39)씨는 아내에게 빨갱이로 몰려 죽기 5년전 명정동에 있는 안옥선 여인과 결혼했다. 이씨는 아버지의 유산도 없다 선친이 남겨준 튼튼한 몸으로 지겟별이, 날품팔이 생활을 하여 왔다.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안여인은 노동하는 남편을 싫어했다. 얼마가지 않아 자식까지 낳게 되어 두사이를 매어두기는 했으나 아이마저 병들어 죽어버렸다. 이때부터 이씨에 대한 안여인의 경멸감은 형언할 수 없었다. 날이 갈수록 안여인의 욕정과 허영은 하나의 죄의식으로 싹트기 시작했다. 공산군의 남침 6.26동란은 수없는 인명을 빼앗고 가계를 파괴한 비극이었으나 안여인에게는 평소 품고 오던 낭만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

인민군이 충무시를 쳐들어오던 50년 8월 16일 이씨는 난을 피해 통영군 산양면 남전마을로 피난을 한틈에 안여인은 진주한 해병대 병조장 양모씨와 정을 맺었다. 안여인은 이 사실이 탄로될까 두려워 일주일만에 되돌아온 남편을 정부와 결탁하여 빨갱이로 몰았다. 무시무시한 음모가 꾸며진줄 모르고 피난에서 돌아온 이씨는 때마침 2명의 부역자를 앞세우고 가는 헌병에게 붙들려 8월 22일 총렬사에서 내다보이는 안산잔숲이 우거진골짜지에서 아내의 욕정의 제물로 죽게된 것이라고 말하고 옥노인은 긴한숨을 내쉬었다. 옥노인은 계속해서 이씨가 총살된 곳은 안여인의 친정집에서 불과 20미터 밖에 안 떨어진 뒤뜰이라 한다. 여기까지 말한 옥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나왔다. 자기 혼자의 욕정의 만족을 패우기위해 남편을 빨갱이로 몰아죽인 안여인은 지금 당시 양병장이란 사람과 부산에서 살고 있다 한다. 남편을 죽이게 한 살인의 욕정도 비극의 11년이 흘러간 오늘 45세의 인생황혼을 바라보며 있으리라.⁷⁸⁾

다음의 사건 내용은 거제지역과 동일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이 사건에는 한국전쟁 당시 우리군과 정보부대, 우익단체 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가족 탁복수, 조성수, 김수태, 김선이, 이성오씨등 8명이 폭로한 민간인학살은 북한군이 충무시에 침입한 83(1950)년 8월 16일을 기해 감행되었다. 당시 충무시까지 북한군이 침투 공격해오자 계엄사령부 주둔부대(주둔관 해군대위 박태진) 진해헌병대 통영파견대(대장 해군 중위 오덕선), CIC, G-2, HID, 민간단체로서 해상방위대 (대장 하채원), 비상시국대책위원회(위원장 이두복), 경찰전투대 등 8개 전투단체 및 수사기관이 주둔했다.

많은 주민들이 검거된 것은 그로부터다. 앞잡이들에 의하여 검거된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때려죽이고 한산도 앞바다 구이포에 신고가 머리에 돌을 달아 수장한 것이라 한다. 특히 지방민으로 된 헌병대앞잡이 해상방위대, G-2등 보조원들은 “헌병보”란 완장을 끼고 평소의 사감을 결부시켜 무수한 민간인을 빨갱이로 잡아들였다 한다. 당시의 학살관계자인 산양면 삼덕리 이양호(이양조, 본명 이판석), 김기행, 공학수배, 황덕운, 구종근씨등은 유족들에 의하여 명단까지 공개되었다. 여자들은 머리에 떨치 종이부대 씌우고 등에는 이적자란 붉은 글을 써붙여 거리를 끌고다니다가 민족의 수로신인 이순신장군의 영현을 모셔 놓은 충열사가 맞보이는 안산에 끌고가서 죽인 것이다.

1983년 8월 14일에는 현 제네바 주재대사로 있던 김용식씨의 숙모도 총살당했다. 당시 헌병대 유치장으로 사용되었던 현해무청 충무출장소옆 해산회사창고에 끌려간 남녀는 옷을 벗기고 난타하여 매일 밤 2,30명씩 발동선으로 실어다 버렸다는 것이다. 그뒤에 수장된 시체가 떠올라 항남동 동충일대의 해변에는 수없이 떠밀려 온 일도 있었다 한다. 민간인을 학살하는데 직접역할을 한 앞잡이들은 당시 계엄주둔관 박태진 대위와 헌병파견대장 오덕선 중위에 아첨하기 위하여 착실한 가정부인들을 빨갱이 운운으로 위협하여 강제로 몸을 바치게 했으며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간부로 있었던 김모씨는 억울하게 난행을 당한 부녀자들이 현재 충무시에 살고 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앞잡이들은 수사관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고는 끌어다가 잔인한 고문을 하고 얼굴이 예쁜처녀나 여자들은 잘봐 준다고 능욕했다는 것이다. 또한 복천관이란 요정을 경영하던 배정희(사망)씨는 박대위에게 미녀를 공납하고 뇌물을 바치고는 박대위를 손아귀에 넣고 잡혀간 사람들의 구명 “브로커”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모형제가 헌병대에 붙들려간 가족들은 배씨에게 매달려 수없는 돈을 바쳤다는 눈물겨운 사실도 말했다 우리민족의 슬픔이요 수치인 민간인무차별학살만행이 다시는 없기를 유가족들은 바라고 있다.⁷⁹⁾ 위의 보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1960년 국회조사 위원회에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1960년 6월 1일 통영시청에서 개최된 양민학살진상조사위원회에서 탁복수 유족회 부회장 등이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게 되었다.

○증인(金采鎬) : 저는 당시 읍장으로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 친동생(金哲鎬, 의열단원, 해방후 국민회 통영부지장, 반민특위 경남 조사원)이 피해자입니다. 대략 그때 경비사령관이라는 박태승(朴泰振), 헌병대장이라고 하는 오덕선(吳德善), 그 다음에 공병대장이라는 신범식 그 세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그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단체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씨아이 씨(CIC), 씨아이 디(CID), 에치 아이 디(HID) 이런 많은 기관...심정(深偵)기관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대단히 일을 잘못했어요. 여기 당시의 경찰서장이나 읍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부정한 사람을 가질 것 같으면 일할만한 사람을 소개를 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오면서부터 소위 공산색채가 있는 사람을 많이 데려다 썼어요. 예를 들면 자기네들의 소위 심정이라 하는 사람 중에는 김덕천이라고 하는 빨갱이를 저희집에 재우고.....그 사람은 총살을 했습니다. 벌써 그 심정보조기관의 소위 문관(文官)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당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경비사령관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적대행위를 하고 면회를 할려고 해도 듣지 않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이렇게 되었습

78) 『부산일보』 1960. 5. 26.

79) 『부산일보』 1960. 5. 24.

니다. 이런 행동으로 볼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비사령관이라고 하는 그가 돈을 벌겠다는 그런 A마음이 있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연히 통영지방에 재산량이나 있는 사람을 막 잡아드린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을 나중에 드를 것 같으면 돈을 얼마나 주기로 하고 나왔다는 사람이 내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라는 사람은 해방전후부터 공산당하고 적대시하고 싸워온 사람입니다. 헌데도 불구하고 잡아갈때에는 제 추측은 빨갱이 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저 사람이 살아 있으면 자기의 앞길이 나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하에 데려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들라 그러면 밤에 와서 잡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잘 기억도 못하게 했어요.

사람을 잡아 죽이기를, 밥해 주었다고 죽이고 또 길 가르쳐 주었다고 죽이고 또 여러 가지 죽이는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된걸 보면 사령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단히 몰지각이라고 하기보다 제 생각에는 어더한 금육에 야심이 먼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걸 느끼고 둘째에는 사람을 죽이면 조사가 있어야 할데인데 뒤에 알아본즉 조사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무슨 죄로 죽는다는 이런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저는 동생이 잡혀가서 싸죽인줄 알았는데 진해로 보냈다고 그래요. 얼마동안 그 말을 믿었는데 진해로 가서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저는 참으로 죽인줄 인정하기는 얼마 후입니다.

또 당시에 빨갱이 한 사람은 여기에 잡혀오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젊은 사람들 혐의로 인정하고 여기에 온 사람들은 이 개개인 말할 것 같으면 어떠한 금전상 관계라든지... 빨갱이 근처에 갔다는 그 사람 밥해주었다고 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련(保聯)까지 합하면 통영시내에 800명 있습니다. 유가족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옮겨간 사람도 있고 미처 모른 사람도 있어서... 그때에 죽은 사람은 통영시내에만 충무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통영입니다. 합해서 보련까지 합해서 8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위원장(최천) 철호(김채호씨의 동생)가 잡혀갈때에는 누가 잡아갔는가를 말하세요.

○증인(김채호) 그때 잡혀갈때에는...

○위원장(최천) 박태진(朴泰辰·박태진·위의 박태'승'은 잘못 기록한 것임) 오덕선(吳德善) 그 사람들이 데려가서 그 뒤에 처리경향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증인(김채호) 8월 16일날 후퇴를 했습니다. 8월 16일까지 후퇴하라는 명령이 헌병대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최천) 소위 책임자들이 그 뒤에 그 사건으로 군법회의에 부쳐졌다든지 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증인(김채호) 그것은 못들었습니다.

○위원장(최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탁선생 얘기해 보시오.

○증인(탁복수) 저는 당시에 인민군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주인되는 안싱강(안신강을 발음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헌병대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날 저녁에 헌병이 들어 와서 가자고 해서 어린애를 업고 잡혀들어가서 직접 사령관 박태진 오덕선한테 헌병대 사령관실에서 직접 취조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린애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주인이 취조를 받고 있는데 군? 묻는 것이 '이입네'를 아는가 또 누구를 아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학을 나왔으니 빨갱이가 아니냐?하고 때리고 그때에 주인이 충무시 관광협회 회장입니다. 그래 충신(忠臣)이라고 하면서 때리고 그래서 그때 큰 대자로 쓰러졌는데 헌병이 바게스에 물을 갖다가 깨 엮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의식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그날 새벽에 시러다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하채원(河采源)이가 해상방위대 대장입니다. 우리 이웃이고 300미터도 안떨어졌습니다. 안싱강이가 인민군이 들어와서 해상방위대 각하집이라고 해서 살림을 탈취해가지고 인민군역 어떻게 했다. 그것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해사(海事)국장 김기영씨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한가지 나중에 원한을 풀려고 할테니 탁복수 그년을 죽여야 하겠다. 그것을 유권기가 들었어요. 그런데 헌병대안에 제가 25일동안 사는 그 동안에 어린애 데리고 있는 사람은 사형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안도태 라는 이가 빨갱이라고 해서 17명 총렬사 가서 마지막으로 총살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인이 술장사를 했는데 그집에 가서 하채원이가 탁복수는 오늘 총살인데 어린애가 있어서 안죽인다고 했다 합니다. 그 정도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통영은 판곳은 한 구데기에 몇백명씩 학살했으니깐 집단학살이지만 우리 통영에서는 산발적인 것입니다.

제가 본 견해로서 제가 25일동안 사는 동안에 140~150명 사형된 것이라고 봅니다. 밤 1시경 되면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돌씩 짍을 저서 30명씩 36명씩 데라고 나가가지고는 바다에 수장합니다. 그러나 이 인원이라는 것은 이백 몇십명에 불과하지만 제가 25일 산 동안에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보아 800명 훨씬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이 빨갱이라고 몰려서 죽기 때문에 3분지2 이상이 객지로 전부 떠났습니다. 이러니까 조사가 곤란할 것입니다.

○위원장(최천) 무슨 이유로 안싱강이를 하채원이가 그렇게 했는가 알아요?

○증인(탁복수)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장한테 배 이름을 조사해 줄 것을 의뢰했어요.

○조일재위원 어느 서장에게 의뢰했어요?

○증인(탁복수) 이(李)서장에게...

○조일재위원 선장 이름은 무엇인가요? 선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수장하기 위해서 신고 나간것도 분명히 압니까?

○증인(탁복수) 네 그 때는 모르겠는데... 제1 진해(鎭海)호 선장이 하창모(河昌模)입니다.

○조일재위원 나이는 몇살인가요?

○증인(탁복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알었습니다.

○박상길위원 선장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죽일때에 이 배에다가 신고가서 죽이는 역할을 한 것은 알었는가요?

○증인(탁복수) 네 그 사람이 지금 거제읍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趙文甲)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릴것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가 그때에 돌아가셨는데 저의 아버지는 노동자입니다. 제 나이 19세때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노동자로서 그 당시의 어부로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고 피난을 가시라고 했더니 우리는 나이 많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 네나 가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피난짐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며칠 있다가 돌아오니 저의 아버지를 데려간 사람이 문창섭이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어요...

○위원장(최천) 문창섭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증인(조문갑) 그 당시에는 문관으로서 앞재비 노릇을하고 데리고 온 것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최천) 무슨 혐의로?

○증인(조문갑) 아무 죄없이 노동자입니다. 이래서 아무죄도 없이 덮어놓고 죄를 진거 같습니다. 문창섭이가 빨개이다 해가지고 그때에 날조를 했습니다. 이래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물에 죽었는가 땅에 파묻혔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위원장(최천) 문창섭은 통영에 있습니까?

○증인(조문갑) 네. 그러나 데모 후에는 진주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최천) 그런 것을 자세히 채집안했습니까? 유가족대표에게 말씀드릴 것은 일반피해자측에서 말씀하신 것은 대개 현병대에서 했다는 것은 대동소이하니 무엇을 채집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증인(나순조·羅순조) 오늘 급작히 국회로부터 조사단이 오실줄은 몰랐고 하여간 오실 줄도 알고 서면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을 종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유가족회를 조직해서 오늘 아침부터 몇사람이 죽고 피해가 얼마라는 것을 채집하는 도중에 있는데 아직 서류가 미처 되지 못했다니 여기에서 몇사람이 죽었다는 것 나이 주소 성명 이런 것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나순조)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것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으나 자신이 없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피해입은 사람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에 가서는 재산상 피해입은 것을 정도로 뽑아 가지고 내주시고 셋째로는 그때 경비사령관이 누구며 계급이 무엇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빼가지고 문서로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맹이를 추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최천) 군이 행동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사중점은 여러분이 지극히 분통했다 내남편 내 자식이 죽었는데 죽은 경로가 지금 들리는 말에는 밀고를 해서 무슨 이유로 잡혀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때에는 그것이 사실이나 아니냐. 아까 저분의 말씀과 같이 문창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때려죽였다면 그런 것을 조사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 지금 그때 잡어드린 것은 문관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부한 사람이 현병대에 말을 잘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관들도 불러서 물어볼 것입니다. 또 물어보기 위한 재료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혹 있으면 우리한테 서면으로 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이 문관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반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처단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말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것도 있으면 서면으로 내주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총피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증인(이성오·李性五) 보련관계 200명은 별도로 놔두고 순전히 현병대나 G-2나 이런데

에 끌려가서 행방을 모르는 사람중에 오늘까지 신고가 213명입니다.

그 당시 유족들의 증언에서 보듯이 희생자는 800여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집단 총살지로 알려지고 있는 곳은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적덕 고개에서 260명과 명정동 안산, 수장지는 산양읍 영월리 앞바다, 동호해안 그리고 옥지도 앞바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 그 당시 문관으로 활동한 이양조, 공학수배, 허장완, 하대원 4명의 증언을 들어보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상황을 정리하였다.

○증인(이양조) : 저는 6.25사변이 돌발하자 6월 24일 날 대한청년단 동단 감찰부장으로서 내고향을 지키자 이런 취지하에서 대한청년단 단장이하 동 단부 간부들이 입초까지 서고 하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8월 26일 27일경에 문관증을 발부해 가지고 문관으로 있으라고 그래서 문관으로 있었습니다. 다른 문관은 외근을 했고 제 혼자 내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관들이 누구를 잡어오라는 것을 못잡어 오면 뺏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문관들도 잡으러 나갑니다. 그 당시에는 170여 명이 영창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방의 유지들이 다 있었습니다. 탁여사께서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김재운(金在潤)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전문적으로 했는데 사정을 두고 하면 문관을 세워놓고 궁둥이를 때립니다. 그때는 4.5일만에 한번 20명이고 10명이고 끌고 나가면 돌 한덩어리씩 지고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때 전문적으로 총살을 시킨 사람이 최문관하고 孫하사라는 사람하고 金하사라는 사람 셋이 했습니다. 정확성이라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억울하다고 봅니다. 나보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산파로 문관이 무슨 마음대로 합니까? 권총을 가지고 쏘고 밀어 넣습니다. 바다에..... 내가 한번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17명을 메루치 부대를 써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늘 사복을 입고 땡겼습니다. 군복을 입고 땡긴 일이 없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마흔살 지금은 쉰살입니다. 그때는 내무를 보니까 구덩이를 파라 그래요. 구덩이를 파지않고 여기에는 총무공 모신데니 안된다고 그랬더니 다른데 가서 구덩이를 또 패렸습니다. 그래 17명을 데리고 오는데 한 구덩이에 넣고 총살을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병들과 CIC, G-2, HID가 했습니다.

○위원장(최천) : 그러면 현병대에서 문관을 시켜서 잡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나요.

○증인(이양조) : 투서가 들어오든지 하면 문관을 시켜서 잡어오라.....또 강덕룡이라는 사람이 과거 자기가 배운 선생의 아들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안매긴 것은 우리한테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고 정보실에 앉아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요. 이래서 그 얘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갔는데 그 뒤에 누구인가 기억을 잘 안 납니다마는 그 사람을 재차 잡어왔습니다. 그래서 메루치 부대를 써워가지고 총살을 시켰습니다.

최근 이판석씨의 추가 증언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학살자 인원과 지역을 말하고 직접 명단을 관리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부산에 있다가 통영으로 8월 25일쯤 왔지. 1950년 통영에는 진해 현병대 오덕선이가 계엄주둔관, 사무실은 통영 광도어업조합 건물에 주둔했어. 그때 문관은 10명(나를 포함하여

11명)있었는데 나는 수석문관이야. 문관들은 빨갱이를 잡아다 들렀지. 그때 내가 못 살린 사람이 통영수고 김기태 교장, 이찬근 한약방 주인 등이 하루 늦에 잡혀와서 죽었지. 내가 오기 전 이를 전에 수백이 죽었지. 문관들이 잡아온 사람들을 직접 조사를 하고, 이적행위자는 죽였고, 내 보낼 때는 손바닥에 계엄사령관 오덕선이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어 줬지. 박태승이는 통영지구 계엄사령관(계급 대위)이고 오덕선은 헌병대장(대위, 법무관)인데 주로 오덕선의 명령에 의해 사람들을 죽였지. 그때 헌병대에는 17명이 근무했었지. 나는 현장에 나갈 때는 일본도를 갖고 총살시키는 것을 봤지. 헌병들이 사람들을 죽일 때 뒤통수에다 대고 앉아 놓고.....돌을 매달아 죽이지. 하루에 48명 그러니깐 이틀에 한번꼴 아니면 사흘에 한번 꼴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지. 그때 사람들을 실고 나간 배는 복천호(헌병대가 쓰던 배), 동창호(문관들이 쓰던 배, 돼지나 소등을 잡아서 얼음에 넣어 놓고 했지)였지. 그때 멀치창고에서 매일 27,8명이 들어앉아 있었고, 인민군도 있었어. 지금 엔젤터미널(통영시 연안여객선 터미널)이야. 또 박태조 형사(통영 경찰서)가 잡아온 것은 살리지 못했어. 경찰들이 잡아온 것은 바로 계엄사령부에 넘겼다. 문관들이 잡아온 것은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었다. 사람들을 멀치부대에 썩어서 죄명을 적은 것을 목에 걸고 시내로 행진을 하면서 충렬국민학교 앞산에서 총살을 시켰다. 안도태는 절골 계곡에서 총살시켜서 학살 장소에 옮겼지. 그때 시민들이 보는 곳에서 칼빙 M1 M2 등을 감고 한 사람씩 4~6발을 쏘기도 했지. 그때 오덕선이 내 일본도를 갖고 한번 내리치라고 하데, 못하겠다고 했지. 그러더니 오덕선이 일본도를 내리치려고 했는데 그도 못했지. 인민군이 온다고 할 때 동창호를 타고 한산도로 피난갔어, 해상 방위대 등이 삼척이 앞바다에서 총살시켰어. 그때 48명을 실고 가서 총살시켰지. 그때 문관은 문창서 이(명정동 출신), 공학수배, 김재운(조서를 잘 꾸며, 고성 경찰서 소속이지), 허종완 등은 총 11명이야. 나는 형집행관이야. 사람들이 명단을 갖고 왔어. 나는 명단을 갖고 있어서 나가고 오고 하는 사람들을 알지. 사람들을 새끼줄로 묶어가고, 학생들(학도병이지)을 시켰어. 그리고 수장시켰지. 그때 두 배가 함께 나갔어. 문관 10명이 직접 총을 쏘아. 한 사람씩 처형했지. 나는 그때 감독관이고 직접 총을 쏘지 않았지. 그래서 일본도를 갖고 나갔지. 그리고 박태규(술도가, 도천도)의 딸 선생을 못살렸지. 오덕선(서울출신)은 도민증 없다고 패서 죽이기도 했어 악질이지. 공학수배는(주로 조서를 꾸미고 신문기자했지). 우리 문관들이 처리한 인원이 800여명이야 명단이 있어서 그러니깐 계엄사령부에 넘긴 명단이. G-2나 CIC 등은 개별적으로 총살시켰어. 그러니깐 별도로 총살시켰어. 학살 중단은 지역 유지들이 사람들이 많이 죽인다 했어 徐소령(진해 해군 헌병대장)을 직접 불러왔어. 서 소령이 왔어 문관들을 마구 때렸지. 사람들을 죽였다고 나는 고성에 있었지. 죄명은 보도연맹이나 좌익계열에 있었다고 조서를 꾸며서 헌병대에 넘겼고, 학생들은 해병대에서 총살을 시켰지. 또 경찰서에서 안정리에 가서 보도연맹원 115명을 죽였지. 절골 계곡에서 17명을 죽였고, 그때 800여명 명단은 내 책상안에 있었지.....학살이 끝날때도그 이후 서 소령이 가져 갔을거야.⁸⁰⁾

이양조(판석)씨의 증언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안정리 115명 집단총살과 문관들이 직접 총살에 가담했다는 것과, 이양조씨가 직접 학살에 가담하면서 명단을 작성하고 감독했다

80) 증언, 2001. 6. 4.

는 것을 증언했다. 이는 오덕선과 이양조(수석문관) 그리고 박태진 등이 책임자격이라고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안정리 학살에 대하여 오영수씨(62, 안정리 거주)는 “감옥에 있던 보도연맹원들을 덕고개와 수직고개 사이에서 집단 총살한 것을 보았다. 총을 쏜 사람들은 경찰관들이었고, 처형 후에는 불을 질렀다. 그때 주민들을 동원했는데, 일부 처형된 사람들을 유족들이 찾아갔고, 그 외에는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었다” 고 말하고, “몇 년전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면 구 변을 공사하는 중에 사람 뼈가 많이 나왔다. 또 동네에서 청계상수도 공사를 하는 도중에 샅에 걸려 나온 뼈도 엄청났다” 라고 말했다. 또 당시 문관인 공학수배(孔鶴秀背)는 학살시킨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 그 당시 헌병대장과 계엄사령부에서 결정하여 처리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때 통영지구 전투 부사령관은 金聖恩 대령이었다. 공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증인(공학수배) : 저는 해방후 광복청년회라는 청년운동을 해왔고 신문기자로서 이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시 8월 16일 한산방면에 피난했다가 8월 17일에 무조건 해군 헌병대에 포박되어가서 무수히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는 해중에 2차나 당기기도 하였는데 ... 그때 피난하였던 사람은 金光禹, 李教仁, 梁宰源, 鄭鏞洙, 金玼燮, 朴범수, 河采源, 朴相輝 외 수명입니다.

○위원장(최천) : 강덕용이가 문관이군.

○증인(공학수배) : 네 반장입니다. 안도태 영감은 강덕용이가 데려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일재 위원 : 증인이 문관으로 임명된 날짜와 그만두고 나온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증인(공학수배) : 임명이니 신분증이니 이런걸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근무하라고 해서 날짜를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만둔 것은 진해헌병대에서 와가지고 해산시켰습니다. 음력으로 8월 12일 날입니다.

○조일재 의원 : 대강 총살한 사람을 무엇을 기준으로 무슨 법적 근거를 적용해가지고 총살을 합니까?

○증인(공학수배) :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상당히 질서가 재편 것처럼 취조관이 둘이 있고 반장이 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취조를 받고 조서같은 것은 김모라는 사람이 꾸미고 서류가 일치되니까 헌병대장한테 가 가지고 헌병대장이 거기에 결재를 하고 나중에 계엄사령부에 가서 계엄사령부에서 확정이 짓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조일재 위원 : 그 당시 해군헌병대의 문관으로 있었지요.

○증인(공학수배) : 네.

다음으로 허종완(許鍾完)은 진해 해군통제부 헌병대 통영과견대 군속으로 50년 7월초 근무했다고 증언했는데, 그는 “헌병대가...한 달포 있다가 민간인을 붙잡아와서 두드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붙들어 와가지고 주로 헌병대 대장인 오덕선이가 선임하사관 손씨와 패였습니다. 그리고 대원들 10여명이 다니면서 민간인들을 데려다가 창고에다가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의 증언 중에는 전쟁의 진행상황에 따라 군인들이 일본으로 피신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될 만한 내용도 있다. 그는 해군 군속으로 근무하게 된 목적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목적이라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피란하게 될 때에는 배를 동원시킬 것이니 중국의 목적이 일본에 들어갈 것이다 급할 때에는... 결국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전부 다 한국에서 있을 수 없고 일본에서 임시 피란할 때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튿날인 6일 부산 동래호텔에서 열린 특위에서는 역시 통영에서 헌병과견대 문관으로 민간인학살에 가담했던 문창섭을 불러 심문하고 있다. 문창섭은 당시 인민군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잡아다 취조하고 처형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일관되게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어 이들 민간인들을 총살·수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털어놓고 있다.

- 조일재 위원=증인이 잡아가면 죽인다는 것을 알았지.
- 증인(문창섭)=네 그것은 알았습니다.
- 위원장(최천)=총살할 때에 보았는가.
- 증인=안봤습니다. 총살할 때에 안갔습니다.
- 조일재 위원=총살하는데 몇 번이나 따라갔는가.
- 증인=그런데 바다에 갈 때에는 따라갔습니다.
- 조일재 위원=어디쯤 갔는가.
- 증인=최의원 어장 앞의 바다입니다.
- 조일재 위원=몇 번 따라갔는가.
- 증인=두 번 따라갔습니다.
- 조일재 위원=배는 무슨 배인가.
- 증인=동찬호 22호인가 됩니다.
- 조일재 위원=어떻게 죽었나.
- 증인=개인 개인을 묶어 가지고 돌을 싣고...
- 조일재 위원=무엇으로 썼는가.
- 증인=권총으로 썼습니다. 돌려 얹혀놓고 썼습니다.
- 위원장=누가 썼는가.
- 증인=최씨가 썼습니다.
- 위원장=두 번 다 문관이 썼다고. 헌병이 쓴 것도 있고.
- 증인=네.
- 조일재 위원=당신은 돌이나 실어주고 묶어준 것 뿐인가.
- 증인=네.(후략)

이와 같은 국회 조사반의 기록처럼 통영에서는 915명이 학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짧은 시일(약 1주일)안에 접수돼 국회에 제출한 명단만도 267명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통영의 경우 대부분 바다에 수장됐기 때문에 유골을 발굴해 장례를 치를 수 없었고, 또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통영의 민간인 학살 지역은 산양면 영월리 앞바다, 한산도 구이포 앞바다, 향남도 동충일대, 명정동 충렬사 뒷편 안산 잔숲 일대, 광도면 안정리 우동(115명 혹은 260명) 등지이다. 희생자는 해병대 문관인 이양조 등 10여 명이 처리한 800여 명과 경찰 115명 그리고 G-2·CIC 등이 직접 처리한 인원은 확인되지 않는

다. 앞의 문관들이 직접 처리한 것은 별도로 관리했다고 한다. 그때 이양조(문관, 총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명단을 작성하였다고 하고 G-2와 CIC 별도로 관리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이 학살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다.

1960년 4월 11일 통영 민간인 학살 유족회에서는 탁복수(卓福守)씨의 6명을 고소인으로 검찰청 부산지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당시 고소요지는 “6.25 전란때 부역했다는 등 구실로 조사한다고 하여 관계 기관서 고소인들의 아버지, 아들들을 연행, 고문치사 혹은 학살했으며 이들 피고소인들 가운데엔 직접 하수자 혹은 허위정보제공자가 포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1960년 6월 15일 부산지검은 통영지청에 지시하여 구체적인 학살에 대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구속수사를 전제로 모두 입건하게 되었다. 탁복수씨 외 6명은 살인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지만, 5.16쿠데타로 아무런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16군부쿠데타 세력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유족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갔고, 당시 조사자료도 모두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통영유족회 대표였던 탁복수씨도 “좌익분자를 애국자인 양 허위선전하여 용공사상을 고취했다” (당시 판결문)는 이유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3) 고성·사천·남해지역의 민간인 학살사건

고성군의 보도연맹 지부 결성식은 1949년 12월 14일 대동극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지난 과오를 청산하고 후생을 맹세한 맹원들과 각계 내빈과 군민 다수 참석하였다”고 한다. (《남조선민보》 49. 12. 21) 그 당시 김기호 고성군 경찰서장과 노기용 고성군수 등이 지도위원 등을 맡았다. 이 지역도 고성경찰서 사찰주임을 중심으로 자수 주간과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보도연맹원들을 가입시켰다고 한다. 고성의 학살 시기는 1950년 7월~8월이고 군대와 CIC, G-2, 해상방위대, 경찰 등으로 추정된다. 학살 지역은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원동마을과 하이면 지역으로 150여명이 학살되었다고 한다.

그때 학살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면, 김진모(고성읍거주)씨는 “고성읍내와 각 면의 보도연맹원들을 모아서 개천면 북평리 원동마을 산골짜기에서 집단 총살했다” 라고 말하고 “그 당시 G-2와 CIC 등이 직접 학살에 관계를 했다” 라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6.25 때 고성군에서 김성은(해병대)부대가 고성 사람들을 끌고 통영군 원문고개 아래 마을인 죽림 앞바다에 100여 명을 수장시켰는데 고성 향토방위군들도 함께 끼여있었다” 라고 말했다.

허택도(83, 마암면 노인회장)씨는 “나의 어머니가 보도연맹으로 끌려가 학살되었다. 그때 고성읍내 보도연맹원 10여 명과 함께 죽었다”고 한다. 그때 고성 경찰서와 민보단, 대동청년단장(마암면 청년단장 김도선, 조판재) 등이 나서 했다고 한다. 또한 김갑성(金甲晟, 그 당시 소방대장)씨는 “마암면에서 최상근, 이상구 등이 잡혀가 죽었다” 고 말했다. 고성군 내에서 1백 여명의 보도연맹원들이 학살되었다고 한다. 현재 사천·삼천포 지역은 보도연맹원 1백 여명을 사천시 장구섬과 사천시 영현면 석대리 옥굴에서 100여 명을 집단 총살했다고 한다. 특히 진주형무소에 있던 일부 보도연맹원들을 트럭으로 싣고 와서 옥굴 골짜기에서 집단 총살했다고 한다. 또한 삼천포 서금동 노산공원에서 집단 총살이 있었다고 한다. 장구섬의 빗발치는 총탄속에서 살아난 문정호씨를 그들은 다시 확인 사살해버려 잔인성을 드러내 두고 두고 유족들에게 한을 심었다.

남해지역의 민간인 학살 사건은 거제지역과 비슷한 수장과 집단총살로 이루어졌다. 1950

년 7월중순 남해군 운천면 월곡 문항 창선마을 앞과 비뜨섬, 진섬(긴섬) 앞등에 29명의 보도연맹원들이 수장당했다. 이 주변의 섬에서는 수장당한 보도연맹원들의 시체 29구가 2, 3명씩 줄에 묶인채 총에 맞아 떠내려왔다. 그들의 시체는 물에 툭툭 불어 있었다. 그들의 시체는 일주일간이나 떠내려왔다.

며칠후 이동면 신전리 북곡골짜기에서는 33구의 보도연맹원이 얼굴이 총알에 짓이겨진 채 발견되어 경찰서로 끌려간 그들을 찾기 위해 해메던 가족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체들 뒤적이며 한과 슬픔에 빠진 그들에게 경찰들은 장례식도 허용하지 않고 시체를 거적에 둘둘 말아 산에 묻어버려 유족들의 슬픔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앞의 희생자의 수백명이 학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남해군의 경우는 해방공간에서 인민위나 각종 좌익사회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며,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의 점령에 따라 인민위원회가 복원되고 치안대원 등이 활동하면서 그 희생자가 많다고 할 것이다. 이는 고성지역과 비슷한 결과를 낳았다. 이에 고성·사천(삼천포)·남해 등지에서 민간인 400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3곳은 진상조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도 피해자들은 말하기 싫다고 하고 한다.

4) 마산

현재 마산 지역은 경남지역중 단일 지역으로 제일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서부경남 지역의 해안과 맞붙어 있어 거제·통영에 이어서 수장된 인원들이 많았다고 한다. 학살 시기는 1950년 7월 15일 보도연맹원들을 시민극장에 집합시켰고 일부 마산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진해 헌병대 마산 파견대와 마산 계엄사령부, CIC, 경찰 등이 7월 25일 이후로 학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희생된 인원은 1960년 국회 조사 과정에서 1,68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른 유족들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여기 국회진상조사에서 증언한 김용국(金容國)과 여러 유족들의 증언들로 정리하였고,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재정리하였다. 먼저 60년 6월 5일 경남도지사실에서 열린 국회 양민학살조사위원회에서 마산 피학살자 유족회 간부였던 김용국씨가 밝힌 마산 민간인 학살사건을 살펴보자.

●증인(김용국) : 그 당시 제 외국은 설흔셋이라고 숙모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때입니다. 외숙은 원래 그 당시 청년운동이라든지 이런데 직접 관련은 안해도 학교를 갔다가 마쳤기 때문에 그래도 지성인이라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변후 음력 6월 1일(7. 15)날 지금은 관직에서 떠났습니다마는 그 당시 도경 형사로서 경사였던 김수홍이라는 사람이 와서 할 얘기가있으니까 나가자 그래 무슨 얘기냐 지금 시민극장에서 강연회가 있다 그러니 들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나갔습니다. 같이 나간 후부터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초량역전에서 펜스홀을 경영한다고 합니다. 그래 4.19전에 우리 삼촌행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아직 생존해 있다. 어디에 있느냐. 형무소에 있다. 어느 형무소냐 하니까 모르겠다고 해서 찾아보았으니 마산도 없고 부산도 없고 해서 그 당시에 죽었다고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A. 그 당시가 6월 1일입니다.

○박상길 위원 : 몇 년도?

○증인(김용국) : 83년(1950년)도입니다. 그때 지서에서 나와가지고 시민극장에 모가지

고 마산형무소에 일단 수감을 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헌병들이 직접 과거 복역한 사람중 과거 보련에 관계있던 사람들 명단을 다 뽑아 갔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없어진 것이 1681명으로 들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 죽었다는 숫자가?

○증인(김용국) : 네.

○박상길 위원 : 지금 명단은 얼마인가?

○증인(김용국) : 250명입니다. 그중에 51명의 여자들이 있는데 이중 47명은 강간에 응했다고 해서 살아났고 그 거절한 3명은 즉시 없어졌습니다. 마산형무소의 담벽에 43발의 탄환 자취가 있습니다. 시체가 손발을 철사로 묶어서 집단적으로 열명 스무명 수장을 했는데 죽은 시체가 사변 그 당시에 어망에 걸려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최천) : 실지로 본 일이 있소?

○증인(김용국) : 지금 내려가면 다살어 있습니다.

○위원장(최천) : 보련인가?

○증인(김용국) : 보련도 있고 보련 아니 보련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보련아니 사람은 그 당시에 민보단이니 경찰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과거부터 좋지 않게 평가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불러나간 것입니다.

○위원장(최천) :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증인(김용국) : 지금 그 당시에 하수를 한 사람은 경찰이 있지만 처형을 할 적에 해군 배에 명령을 해서 철사로 묶고 올라오는 사람은 기관총으로 쏘았으니까 확실한 대상자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 그때 시민극장에 1천681명이라는 죽은 이 사람들이 태반 한꺼번에 모였는가?

○증인(김용국) : 일단 전부다. 시민극장에 집합시켜서 형무소로 돌아간 것이 있고 변두리 사람은 경찰서에서 집합시켜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 데려간 사람은 경찰이 주로 했는가?

○증인(박용국) : 가족에 이르는 사람은 파출소 형무소 경찰들 그리고 민보단 청년들이 령게 되고 또 형무소에 복역하는 사람들의 카드를 뽑아간 것은 해군헌병들입니다.

위의 김용국씨의 증언을 요약하면, 그 당시 책임자인 경찰, CIC, 민간우익단체 등은 50년 7월 15일 보도연맹원들을 마산 시민극장에, 마산 외곽의 창원군 지역의 경우 파출소나 면사무소로 소집하였고, 이렇게 소집된 사람들은 모두 마산형무소(현 창동 코오롱빌딩)로 압송됐고, 1~2주일 가량 형무소 안에서 CIC(특무대)의 분류작업을 거쳐 마산 해안가로 실려나가 수장되었던 것이다. 1950년 7월 15일 책임자들 현황을 보면, 마산지검 徐丙均, 마산지구 정보대장 姜淳元(해군중위), 비상대책위원 부위원장 姜泰鎬, 한청단장 柳哲馨, 마산지구 衛戍사령관 李裕成 육군 중령, 마산지구CIC대장 許泰榮, 마산헌병대 朴珍錫 등이었다. 7월 15일 이후의 마산 지역을 책임을 맡고 있던 강순원과 이유성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도연맹들을 전원 구속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해군 진해통제부 정보참모실 마산지구 파견대장 姜淳元 해군대위 담.